

#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 담론 분석을 통한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 담론 모색

남정섭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Ⅰ 연구수행자 Ⅰ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영남대학교	남정섭 교수	
영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홍은숙 박사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 차례 |

■ 국문요약 .....	7
--------------	---

## 1. 서론: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연구 배경 • 9

## 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14

2.1.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개념과 이데올로기 성찰 .....	14
2.1.1. 용어 고찰 .....	14
2.1.2. 이데올로기 고찰 .....	18
2.2 한국에서 다문화 현상 .....	22
2.2.1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다문화현상 .....	22
2.2.2.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 .....	29

## 3. 한국에서의 반다문화주의 • 53

3.1 민족주의의 제 삼의 도래와 반다문화주의 .....	53
3.2 다문화 민족주의 .....	57
3.3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특수성 .....	59
3.4. 반다문화 현상 .....	62
3.4.1 노동의 문제를 제기한다. ....	62
3.4.2. 국민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	63
3.4.3. 소수자 권익의 오류를 지적한다. ....	63
3.4.4. 언론보도의 편파성을 주장한다. ....	64
3.4.5. 다문화 관련 법 .....	64
3.4.6.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 .....	64
3.4.7. 외국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	69

## 4. 서구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실패론 • 76

4.1. 서구의 다문화주의 실패론 .....	76
4.2. 반다문화주의 이론 .....	85
4.2.1. 반다문화주의 담론 분석 .....	85
4.2.2. 다문화 혐오증 비판 .....	89

## 5. 결론 • 92

5.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가능성 .....	92
5.2.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위한 제언 .....	94
5.3. 상생을 위한 한국적 다문화 모색 .....	96
■ Abstract .....	100
■ 참고 문헌 .....	101

## | 요약 |

이 연구과제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문화적 종속, 동질화)와 ‘세방화’(문화적 상호 의존, 한국적 특수성)라는 지적 매트릭스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와 세방화라는 사회적 배경은 다문화주의로 집약되면서, 이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는 반다문화 담론이 대두하여, 다문화 문제는 한국인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 국가의 방향성 문제까지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 과제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반다문화주의 담론이 대두한 현실과 다문화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경쟁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적 대안 다문화 담론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 과제는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와 반다문화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연구한다.

이본 과제는 다층적/다중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다문화 담론 지형을 그리면서 한국의 다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세부적 연구에 있어서 다문화 관련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하여 다문화 담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한다. 또한 유럽의 다문화 담론인 ‘상호 문화주의’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식민 경험이 현재의 다문화 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피식민지배 경험의 영향을 규명하여, 한국적 다문화의 특수성을 규명한다. 따라서 이 과제는 한국형 담화주의 담론을 구축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 담론 연구’인 이 과제는 세계화의 한 측면이었던 다문화 담론을 세방화 시대의 담론으로 발전시킨다.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사회발생학적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과 미래의 사회를 지향하는 다문화 담론을 제시할 것이다.





## 1. 서론: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연구 배경

오늘날 한국 사회는 밖으로 외연 확대를 지향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문화적 종속, 동질화)와 안으로 내실과 다양성을 함께 지향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문화적 상호 의존, 한국적 특수성)라는 지적 매트릭스(Intellectual Matrix)를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이러한 전 지구적 변화의 물결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담론으로 집약되면서, 급격한 정책 변화와 사회적 삶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사회 현상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이전 시대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이질적인 인식론적 그리고 존재론적 프레임을 재구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생소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최근 반다문화 담론이 부상하여 한국 사회에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적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이 정치적 설비로서 하나씩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다문화주의의 부상은 이데올로기적 논쟁과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인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화와 세방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거대 담론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문화와 반다문화의 논쟁은 개인성을 넘어서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는 '사회 정의'와 '국가 방향성 제시'의 문제이기도 하며, 국가의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과 공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화와 세방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와 반다문화라는 대립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산업구조의 변화', '인간 삶의 질적 변화', '고령화', '실업률 증가', '성장과 복지의 논쟁'과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상과 갈등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즉 세계화와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주의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인종적 민족적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다문화주의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대한민국 사회에 세계와 국가와 개인의 존재론적 관계

성을 조망하게 하는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는 화두이다.

동질성과 특수성이라는 세계화와 세방화가 만들어낸 다문화주의는 ‘상호 연계성’과 ‘복합성’의 특징을 갖게 된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이민국가가 아닌 ‘단일민족국가’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더욱 특수한 형태의 다문화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의 특수성은 이에 멈추지 않는다. 한국은 ‘분단국가’, ‘피식민의 경험’, ‘복지국가 경험의 부재’와 같은 서구의 다문화주의 국가들과는 절대적 비교가 불가능한 특수한 환경에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한국적 특수성에 근거해 내부의 다양한 현상들과의 비교와 세계 각국과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고찰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는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세계화는 곧 선진화를 뜻하였기 때문에 세계적 혹은 국제적 기준에 어울리도록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과 각종 조직과 정책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선진화라고 간주되었다. 아울러 세계화를 국내에서 이룩하는 방편으로 다문화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선진화는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는 다문화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또 선진화를 절대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함께 다문화 역시 절대선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고 다문화 정책을 여러 정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전개하면서 많은 부작용과 시민적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를 넘어서기 위한 세방화, 세방화의 한국적 모습으로 표출된 다문화주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다문화주의’의 발생을 가져왔다. 즉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 반다문화의 상충과 공존은 한국 사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는 세계화 이면의 가려진 현실을 드러내며 동시에 국민이 행복한 다문화 다인종 사회 창조를 위한 기획과 정책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2005년 즈음해서 학계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붐을 이루었고,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다문화주의에 입각해 전환한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에서는 반다문화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다문화 관련 논의는 21세기 지적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 세방화와 연계하여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에

다다랐다.

한국에서의 반다문화는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작금에는 집회를 비롯한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여 학문적 주목과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담론이 이미 대두하여 시민단체와 노동계와 학계의 각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반다문화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반다문화주의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사회 현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화와 반다문화를 정치적 편견 없이 통합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첫걸음일 것이다.

다문화주의 시대에 반다문화주의 부상은 실질적인 한국적 다문화 담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부름일 것이다. 반다문화주의의 부상은 여태껏 서양 주류 담론을 따르면서 다문화주의를 한국사회에 변형 주입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 시대의 반다문화의 부상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한국적 상상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왕에 주창해왔던 세계화와 세방화라는 지적 매트릭스에서 한국의 주도적 다문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작금에 문제시되고 있는 반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맞는 대안적 다문화 담론의 확립은 유럽과 호주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 선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자생적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 담론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분열과 대립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인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바라보아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사회 발생학적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곧 세계화와 세방화의 시대에 행복과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제기하는 창조적 이데올로기의 제시일 것이다.

즉 세계화, 세방화, 그리고 다문화는 사회 현상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발

생학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깊이 연관된 현상이며 담론이기도 하다. 다문화와 반다문화를 비롯한 오늘날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는 다문화 현상을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반다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호주 및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날의 다문화 현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다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화-세방화-다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적 배경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근거한 한국의 다문화와 반다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너머의 탈근대를 향유하는 오늘에 있어서, 개인으로서의 ‘정신발생학적 정체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발생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적 다문화 담론 구축은 세방화 시대의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와 반다문화의 발생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좀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다문화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다문화주의 논쟁을 정리하여 담론과 구도를 확실히 파악하여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을 논하기도 하고, 한국의 다문화주의 전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세계화-세방화-다문화는 사회 현상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발생학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깊이 연관된 현상이며 담론이기도 하다. 다문화와 반다문화를 비롯한 오늘날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는 다문화 현실은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를 하나의 상상계로 상정하고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상상계’<sup>1)</sup>(Social Imaginary)는 다름 아닌 세

계화와 세방화가 낳은 다문화 현실에 있고, 한국 사회는 세계의 어느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다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1)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지식세계에 등록한 용어인 상상계는 여러 인문사회학 분야로 전용되어 의미가 확장된다. 사회적 상상계(Social Imaginary)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의해 '실천의 토대'로 정의되고, 전문적인 이론을 갖춘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삶을 방향 짓는 하나의 생활태도로 규정된다. 라캉의 상상계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면, 사회적 상상계는 집단적인 것이다. 테일러는 사회적 상상계를 기준으로 서구의 근대와 전근대를 구별한다. 즉 근대는 경제·공론장·인민주권이라는 사회적 상상계를 만들고 발전시킨 사회라는 점에서 전근대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집단적 상상이 응집성을 띠고 사회적 실천의 주요 요소가 된다면, 집단적 상상은 존재와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테일러는 집단적 인식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이해를 상상계와 연결하여 역사의 전환점과 각 시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 상상계는 다시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그것을 내면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집단 상상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전복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맨프레드 스티거(Manfred Steger)는 사회적 상상계가 '실체'와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상계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의식으로 본다. 스티거의 상상계의 정의를 다문화에 적용하면, 다문화 현상은 역시 사회적 상상계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상반된 가치·감정·사상이 쟁론을 통해 점차 사회 전반으로 퍼져 대중화되면서 지지와 반론을 얻는 가운데 정교해지고 엄정하게 다듬어진 뒤, 결국 실천과 행동을 낳고 '집단 상상'으로 존재를 얻어 기능한다. 이로 인해 아무도 사회적 상상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사회적 상상계는 각 시대의 지적 매트릭스(intellectual matrix)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되어가기 과정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맥락과 맞닿은 연고적 자아로서 각 개인은 사회적 상상계의 일원이 '되어가기'(becoming)를 한다. 사회적 상상계가 발생한 이상,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상상계가 요구하는 어떤 실천을 하면서 되어가기의 과정을 밟는다. 즉, 공동체내에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상상계는 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기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사회적 상상계의 이러한 경향이 '이데올로기'(ideology)의 발생을 낳고,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허상으로 우리 사회의 실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즉 되어가기의 과정에 진입한 이상 사람들은 본질에 대한 근원적 이해 없이, 이를 실천하기에 급급해지는 형국에 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원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 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2.1.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개념과 이데올로기 성찰

#### 2.1.1. 용어 고찰

지금 ‘다문화’라는 용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상황 그 자체를 기술하는 용어”(전영준 201; 이귀우 재인용)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논의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엄한진의 지적처럼 “다문화 사회라는 객관적 현실과 다문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것이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84)되기 때문에 다문화‘현실’과 다문화‘주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 등과 같은 용법에서 ‘다문화’는 다문화 현실 혹은 현상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현상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하려는 생각과 태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현실을 대하는 일종의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영어에서 다문화주의는 ‘multiculturalism’이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동화주의라고 번역하는 ‘assimilationism’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이민자들이 떠나온 나라의 문화적 관행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민자들이 이민 온 나라의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인 반면에 동화주의(assimilationism)는 이민자들이 이민 온 나라의 문화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이민자 개인의 행복과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고 보는 생각이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샐러드 통(Salad Bowl)이나 모자이크(Mosaic)라는 은유로서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인정하는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처음으로 국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다문화주의의 선도 국가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가치체계에 동화되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동화주의를 이민자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한다면 현실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에 따른 것인지 동화주의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명확한 개념 이해는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주의적이냐 동화주의적이냐를 사상적으로 따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문화정책이 다문화현실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다문화 미래를 유도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사회나 국가의 다문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다문화주의만을 따르거나 동화주의만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문화주의적 기조가 우세하지만 부분적으로 동화주의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고 반대로 동화주의적 기조가 우세하면서 다문화주의적 정책이 가미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정책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태도가 혼재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화주의적인 접근법이다. 반면에 결혼 이민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정주민 한국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혼재는 다문화 정책 안에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 정책에 역시 존재한다.

이종두와 백미연의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논문에서 캐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가 이민자 통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제시한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 모형(the 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 모형(the multicultural model)이 국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세 가지 모형을 국내의 이민자 정책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반면 동화 모형은 결혼 이민자 정책에 알맞은 모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주화와 귀화의 대상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면서 국내의 노동 부족분을 채우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임시 노동력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아시아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아내가 되고 한국인을 낳을 한국인으로 인식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하여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훌륭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명백히 동화주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한 사회나 국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반드시 하나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동화주의가 더 적합할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나 동화주의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살펴볼 개념은 상호문화주의이다. 이 개념은 영어로 ‘interculturalism’인데 유럽에서 널리 쓰는 개념으로 흔히 유럽 연합이 강조하듯이 ‘상호문화 소통(intercultural dialogue)’이란 용어로 통용된다. 상호문화주의는 자칫 다양한 문화 집단끼리 고립되어 공존하는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곧잘 빠지기 쉬운 본질주의(essentialism)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환영받는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집단 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의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면서 새로운 국가 문화를 창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받는 “상대주의와 정체성 정치학”에 연루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보다 우수하다고 한다(Kolapo 134).

상호문화주의는 우수한 개념임에 틀림없으나 실행하기에 쉽지 않다. 유럽 연합은 상호문화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를 채택하고 있다. 다언어주의는 “문화 간 대화 및 사회적 결속을 뒷받침하는 원리로서 다른 언어들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방책”(김희경 유럽연합 다언어주의 16)으로서 유럽 연합은 “모든 회원국 아동들이 의무 교육 기간 동안 최소한 2년 연속으로 모국어가 아닌 유럽 연합 회원국의 언어를 2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Council Resolution of 31 March 1995 on improving and diversifying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ithin the education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95/C 207/01)에서 법으로 규정한다. 물론 이 정책의 이면에는 영어와 같은 강력한 세계어(lingua franca)의 등장으로 유럽의 다양한 언어가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상호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 28개 회원국 국민들이



회원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서 유럽의 다언어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언어주의는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외국어를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습득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로서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 문화 정책 전반이 이를 뒷받침하여야만 한다.

2009 유네스코 세계 보고서(The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는 “상호문화 소통이란 완성에 이를 수 없는 끝이 없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통이 혈연적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공유할 경우에도 쉽지 않는데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어렵다. 몇 해 전에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사실 유럽 인들과 혈연 종교 문화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 무슬림들을 겨냥한 것인데 이 점을 보웬(Bowe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카메룬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겨냥했으며 메르켈은 터키 이민자들이 느리게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사르코지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겨냥했다”(2011).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혈연과 종교와 문화와 역사를 크게 공유하지 않는 집단 사이에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상호문화주의가 이상적인 만큼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우리가 상호문화주의를 선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다문화주의나 동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개념들이 서구의 토양에서 발생했고 또 통용되었기 때문에 서구적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구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多文化)는 용어의 표면적인 의미 때문에 multi(多)culture(文化)의 번역어로서 정착되었고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의 multiculturalism 역시 다(multi)문화(cultural)주의(ism)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의 다문화 정책 기조는 북미 특히 미국식의 다문화주의 보다는 유럽의 상호문화주의와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훨씬 더 가깝다. 다문화주의는 북미의 multiculturalism의 번역어이고 또 한국의 다문화의 번역어로서 multicultural을 쓰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단어는 국내외적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정책을 논할 때 다문화주의란 용어의 사용을 되도록 피하고 다문화를 영어로 번역할 때 multicultural을 대신할 영어 단어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를 표현할 새로운 용어를 창조하는 것은 한국의 다문화가 서구의 다문화와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서구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지배를 자행했던 제국이었거나 최소한 이러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특히 유럽을 다문화 시킨 인적 자원이 대부분 과거 피식민지 사람들이라는 점은 한국과 뚜렷이 대조된다. 한국은 피식민을 경험하였으되 서구 제국의 식민 지배가 아니라 아시아의 일부인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피식민 경험은 한국의 다문화를 형성하는 다수인 아시아인들이 서구 제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공통된 역사적 기억을 부여한다. 서구가 과거의 식민과 피식민의 역사 위에서 다문화를 경험한다면 한국은 이러한 차별 없이 다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은 소위 말하는 온정적 다문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는 현실에서 펼쳐지는 다문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 기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표현할 새로운 개념의 창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 2.1.2. 이데올로기 고찰

지금까지 많은 다문화 담론에는 서구 사회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이다 따라서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선진화 작업이며 선진화 작업은 곧 선한 일이기에 다문화주의는 선하다는 이데올로기적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있었다. 이 논리의 탄생에는 다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1993년 11월에 김영삼 정부가 국제화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국제화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정의하였고 다음 해 11월에는 세계화를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국제화와 세계화란 구호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값싼 노동력 유입을 원했던 기업의 요구 역시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데에 일조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증가하던 국제이주는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대표적인 이민국인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최고조에 이른다(엄한진, 세계화 43). 그리하여 김영삼 정부가 주도하던 세계화라고 상징화된 흐름은 국제이주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세계 현실과 조응하여 국내에 새로운 큰 조류를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새 조류가 바로 다문화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호로서 받아들여진 세계화는 현실에서 선진 서방 세계와 비슷하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외국어 학습을 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배워야 하며 선진 세계를 체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같은 맥락에서 선진 서방을 배우는 것이 세계화였던 만큼 서구의 현실인 국제이주를 통한 다문화 역시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선진화하기 위해서 서구를 닮아야 한다는 단순 논리의 반대편에는 비슷하게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한국인 스스로를 비하하는 논리이다. 즉 한국인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에 단일 혈통적이고 단일 문화적이다 따라서 단일 혈통과 문화는 저급하다는 자기 비하적인 인식이다. 이 인식은 서구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기에 다문화적이고 따라서 다문화는 선진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기비하 다문화주의는 서구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인식의 이면이다.

“단일민족의 자부심, 유교적 가부장제, 폐쇄적 경향,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편견”이나 “단일민족국가의 신화에 몰입”(전영준 199)이나 “시대착오적인 순혈주의”처럼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진찰하는 표현들이 얼핏 올바른 것 같지만 맥락이 생략되고 정치 경제 역사적인 고민 없이 한국인을 열등 일반화

시키는 이런 표현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서양 중심주의고 편협한 동양 인식에 다름 아니며 역설적이게도 다문화주의가 극구 지양하려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한 인종 차별이다. 국내적인 예로는 대구 경북은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유교적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식의 열등 일반화가 매우 서울지방 중심적이고 반다문화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다문화 정책이나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다문화 집단이나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가 이미 암시하듯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규정하려는 시도야 말로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 귀결될 위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전 문단에서 인용한 한국인을 규정하는 특성과 정체성을 합치면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유교적인 가부장주의와 신화적인 단일민족성과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정체성으로 가진다고 규정해야 하며 대구 경북인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며 능동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흑인이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폭력적이며 지능이 떨어지고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하였다고 규정하던 흑백 인종차별주의와 무엇이 다르며 전라도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변심 잘한다고 규정하던 지역차별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정책 기조를 정하고 정책을 실행하려면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역성이나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한 시도이다. 왜 본질주의냐 하면 나와 남의 차이는 남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하고 그것과 다른 나의 특성을 규정할 때 인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본질주의인데 이러한 본질주의는 불가피하게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안에 모두 내재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소수 집단이 누리는 다른 문화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큰 범주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작은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더 크게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자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서로 다름(차이)’과 ‘같이 하나 됨(공존)’이라는 대립되는 가치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조화롭게 하나로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일종의 모순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논리적 모순을 우선 가지며 이에 더하여 차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렇게 부각된 차이를 인정하고 권장하자는 태도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본질주의의 특성을 가진다. 다문화주의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본질주의를 어찌할 것인가?

논자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이 본질주의를 존재론적 본질주의가 아니라 도구적 본질주의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어떤 특성에 관한 표현을 다문화론을 논의하기 위한 언어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어떤 문화적 인종적 집단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어떤 특성에 관한 표현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표현이 위치하는 정치 경제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그 표현이 과거지향적인 죽은 표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표현이 되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반다문화 담론과 현상을 살펴보아야 필요성을 발견한다. 차이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of differences) 즉 차이를 전시하고 찬양하는 데에 치중하는 낮은 수준의 전시 행정적 다문화주의는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다문화주의 분파의 탄생과 다문화주의의 계토화를 낳으면서 결국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에 한 몫 하는 불행 을 낳을 수도 있다. 다문화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다문화 현상과 담론에 대하여 고찰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 2.2 한국에서 다문화 현상

### 2.2.1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다문화현상

#### ① 대구 북부정류장 다문화거리

##### 가. 대구 북부정류장 다문화거리 유래와 특징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에 위치한 북부시외버스정류장 일대는 약 2008년부터 다문화 거리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서대구산업단지과 같은 인근 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북부정류장을 통해서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레 외국인 거리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모인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그 모임 횟수가 점차 잦아지고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을 상대하는 상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북부정류장 다문화 거리에서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부분은 외국 음식을 파는 가게와 식당이거나 외국인들을 위한 휴대전화 가게이다. 동남아시아 식품점·음식점, 중앙아시아 음식점 등은 오랜 타향생활로 고향 음식이 그리워진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다. 휴대전화 가게에서는 선불폰과 같이 일반 휴대전화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휴대전화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도 이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휴대전화들을 일반 휴대전화 매장보다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게 뿐 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을 위한 유흥점도 눈에 띈다. 베트남 노래방 등과 같은 시설들은 북부정류장 다문화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인근 공단의 외국인 노동자 수와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주변의 주거 문화와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외국인 전용 아파트나 빌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시설이 고급스럽지는 못하나 가격이 저렴한 여관에서도 외국인 숙박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대구 북부정류장 주변 외국인을 위한 가게

#### 나. 대구 북부정류장 다문화거리 투자

대구 서구청은 2012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2 생활형 지역공공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대구 서구청은 정부 지원금 6억 원을 북부정류장 일원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서구청은 이 북부정류장 일원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류장 주변의 낙후된 시설 개선과 함께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외국인문화거리 형성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 대구 북부정류장 다문화거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구 서구청에서 북부정류장 일원을 외국인문화거리로 개발시킬 것이라는 사업 소식에 이 지역 상인과 외국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한다는 파키스탄인 노먼 씨(30)는 “허름한 정류장 일대가 정비되면 외국인도 많이 찾아올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류장 상가변영회도 북부정류장 일대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외국인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우 서구청 도시관리 과장은 “외국인 거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을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어울리면 순기능도 많다. 지역 특성을 살려 내외국인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관리 하겠다”<sup>2)</sup>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인근 비산동 주민들은 북부정류장 주변이 외국인범죄의 온상지로 변질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비산동 주민들은 밤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밤길이 무섭다고 주장하며, 외국인거리가 조성될 시에는 더욱 무서워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남일보 기사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거리 정류장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여·26)는 “저녁에 버스에서 내려 걷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나와 눈을 마주치며 따라온 적이 몇 번 있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며 “외국인거리가 조성되면 밤길이 더 무서워질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학생 노모 양(15)은 “밤 9시만 되면 외국인이 너무 많아 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한다. 학원차가 바로 집 앞까지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주부 황모 씨(47)는 “지금도 외국인이 많은데 앞으로는 낮에도 외출을 삼가야 할 것 같다”며 염려를 드러냈다.

외국인을 세입자로 받고 있는 인근 건물주들도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면 가뜩이나 낙후된 동네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건물주인 장모 씨(62)는 “처음에 외국인이 두 명 세 들어 살았는데 한 달 뒤에는 10명으로 불어나서 황당했다. 기존 세입자가 자꾸 동료를 끌어들이는 것 같다”며 “지금도 주거환경을 어지럽힐까봐 외국인을 안 받고 있는데 외국인거리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구 북부정류장 일원의 다문화거리는 찬반의견이 대립되어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 북부정류장 주민들의 상반된 견해는 다문화 거리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국경없는거리’가 상징하는 다인종 다문화적 전경이고 다른 하나는 ‘무섭고, 더럽다’는 부정적 이미지다.” (이부미 244)

2) 출처: 최수경기자 명민준 인턴기자.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 일대 ‘외국인문화거리’ 조성” 영남일보 2013년 9월 30일.



라. 북부정류장 인근 상인 인터뷰 내용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북부정류장 인근에 한 상인과 본인의 동의하에 인터뷰 한 것으로 인터뷰 날짜는 2013년 10월 8일 금요일이며 인터뷰 장소는 그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다.

(질문) 서구청에서 다문화 거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는가?

(주민) 서구청으로부터 설문, 전화 한통 받아 본적 없으며, 마을 주민들은 다문화거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들이 이 동네에 들어온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떠돌고 돌아다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넣고 아무데나 버립니다. 동네 주민들이 대신 치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빈번하고, 이사 때 마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동네 미관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더럽고 시끄러워져서 주거 환경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다문화 거리가 생기면 상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자신들이 개업을 하고, 서로의 가게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좀 잘되었지만, 이주 노동자 상권이 생기면서 한국인 가게는 잘 안됩니다. 자기들 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 공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서대구 공단에 한 의료업체 관계자와 본인의 동의하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인터뷰 날짜는 2013년 11월 9일 토요일이다.

(질문) 이현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에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업체 관계자) 얼마 전 사택을 전세 놓으려고 동네 부동산을 찾아 갔는데, 참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현공단, 서대구 공단 일대에는 한국인에게 세를 놓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지역은 이주 노동자의 공간이 되어, 부동산 거래 역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 제가 사는 곳이 한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된 거죠. 집값도 떨어지고 한국인간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거래에도 다문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사택을 세를 놓지 않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질문) 공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까?

(업체 관계자)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정보 교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공장으로 옮겨 다녀서 이들의 급여가 많이 올라서 우리 봉재공장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20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이주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많이 올라가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봉재 공장 이외에 염색 공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업체 관계자) 염색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염색 공장의 임금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비교적 높은 철강 업체 쪽으로 이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염색 공장에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소수입니다. 요즘 한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체제가 비슷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3D가 아닌 이상 외국인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임금이 높아도 3D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3D에 외국인 노동자가 몰리고, 노동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임

금이 올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② 경산 진량공단

### 가. 경산 진량공단 외국인 자율방범대

경산시 진량읍 진량공단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진량공단 외국인자율방범대’는 발대식을 가졌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초창기 대원들은 총 21명으로 파키스탄인 8명, 중국이 5명, 스리랑카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이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량공단 주변의 치안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 발대 이후 지역민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얻게 되었다. 방범대는 외국인 범죄 예방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초기 정착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 통역 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경산경찰서는 외국인도움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관계, 회사 내 폭행피해 등 인권 침해 문제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 등을 해소해 주는데 이에도 외국인 자율방범대, 다문화가족센터 등이 서로 치안망을 조성하여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경산 진랑공단 외국인 자율방범대 발대식 출처: 경북일보

#### 나. 경산 진랑공단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2010년에 경산경찰서는 진랑 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경산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이스 피싱피해를 방지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면허 운전이나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에 대해서와 보이스 피싱피해 방지에 관하여 그리고 체류지 무단이탈 방지 등이다. 범죄예방교육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간과해버리는 법률 등을 교육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현지체류생활을 돕고자 한다.

2013년 8월에도 경산경찰서는 경산시 진랑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했는데, 이날은 성폭력, 전화사기, 통장 매매,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시 대처요령 등의 교육이 시행되었다. 정우동 경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를 방문해 범죄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sup>3)</sup>고 밝혔다.

### 2.2.2.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치적 혹은 행정적 설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정리 분석하여 정책적 비판과 비전을 제시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위한 심의 조정을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시행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단체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한국의 다문화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닌 결혼을 하러 온 외국인 이주 여성들에게 맞춰져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법과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국가 및 각 지자체가 협조하며 중층적 형태로 지원법이 실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민자 부모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가족 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는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이 있다.

방문교육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족에게는 주 2회 2시간씩 한국어 지도사나 아동양육지도사가 방문하게 된다. 방문교육 사업에서는 언어소통문제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조기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파견되며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3) 출처: 김진만기자. “경산署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교육” 매일신문 2013년 8월 20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된 결혼이민자는 입국초기 상담,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와 상담, 가족 간·행정기관 이용 때 통·번역 활동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세계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제공한다. 언어발달 지도사는 각 센터에 배치되어 센터 내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인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파견되어 언어발달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언어영재교실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만3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나, 비다문화가족 자녀이다.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전환되어가는 국가의 실태에 대비하여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려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대비한 보육 지원 예산안 중에 포함되어 있다.

### 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비판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먼저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비판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다문화담론이 국민들과의 민주적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정책적 목표 달성에만 급급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혜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중층적 존재성)인데 이들은 여성노동력의 이주이면서 한국남성의 아내이며 한국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정책적 다문화주의가 앞 다투어 펼쳐진다. 그러나 국내 다

문화 정책은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의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역차별적 다문화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내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정에게 결혼 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의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다문화 가정 수가 증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도움금 무료지원,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 초대권, 무료건강검진, 고향방문 항공권, 토픽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배정, 분양시 우선 공급대상, 전제자금 대출금리 할인, 보육료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다문화 가정에게 제공한다. 이런 정책은 역차별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차등하게 지원을 하여 복지혜택에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KBS 방송 프로그램 중 ‘러브 인 아시아’이란 프로그램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런 방송이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방송이 나서서 국제결혼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다문화정책은 단순히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문화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갈등,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과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다문화 실행 예산에 대한 논의 (도표)

□ 여성가족부 2012년 다문화 지원 예산안<sup>4)</sup>

### 가.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연계

여성가족부와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의 일

4) 다음 자료는 여성부 2012년 예산안이 출처임을 밝힌다.

자리 마련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	1,400	1,400	0	0.0

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사업은 결혼이민자 혹은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관련 민간단체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1,926)	2,483	4,123	1,640	66.0

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본 사업은 예산은 지역센터 운영과 거점센터 및 지원단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에 사용된다.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32,983	46,566	51,808	5,242	11.3



## 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57)*	-	1,726	1,726	순증

\* 2011년 결산액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에서의 내역사업 예산임

## 마.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은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모국어 상담과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기관에서 시행되어왔다. 이 사업의 예산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종사자 교육비,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에 사용된다.

##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4,730)	4,770	4,901	131	2.7

## 바.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 멘토링과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497)	600	600	0	0.0

※ ( )안은 복권기금

### 마.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이 사업은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에 따라서 다문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또래집단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750)	750	220	△530	△70.7

※ ( )안은 복권기금

### 보건복지부 2012년 다문화 지원 예산안<sup>5)</sup>

〈보육지원 강화〉

(백만원)

구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	주요명세
계	3,028,567	4,131,345	1,102,778	36.4	
□ 어린이 집 운영 지원	423,153	444,463	21,310	5.0	
○ 보 육 돌 봄서비스	423,153	444,463	21,310	5.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172명, 419,672백만원 → 63,907명, 441,151백만원 -국공립, 법인 42,212명, 267,320백만원 → 42,427명, 287,260백만원 -영아전담 6,308명, 51,268백만원 → 6,409명, 58,860백만원 -장애아통합 1,460명, 10,393백만원 → 1,362명, 10,443백만원 -방과후 222명, 1,028백만원 →

5) 다음 자료는 보건복지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가 출처임을 밝힌다.

## 2.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구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주요명세
				%	
					140명, 1,084백만원 -시간연장형 13,000명, 64,385백만원 → 10,000명, 49,278백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526명, 3,481백만원 → 500명, 3,312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91,291	2,598,219	206,928	8.7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91,291	2,598,219	206,928	8.7	○지원인원 : 1,126천명 ○지원단가 : 전년 동 ○평균 국고보조율 : 49.4% ○지원예산: 22,358억원→25,153억원 -0~2세 : 18,646억원→21,325억원 -3~4세 : 3,712억원→3,828억원 *13년은 '12년 맞벌이, 다문화지원에 분산된 예산 내역을 포함 ○지원대상 : 만0~4세 영유아 가정 전계층 ○지원인원 : 1,011천명→1,112천명 -0~2세 : 678→769천명 -3~4세 : 333→343천명 *13년은 '12년 맞벌이, 다문화지원에 분산된 예산 내역을 포함 ○지원단가 -(정부지원시설)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5천원, 3~4세 220천원 -(정부미지원시설) 0세 755천원, 1세 521천원, 2세 401천원, 3~4세 220천원 *3~4세 단가인상분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 만0~4세 부육료 지원	2,235,790	2,515,233	279,443	12.5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13,475	-	△13,475	△100	※12.3월부터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재정교부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전액 부담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 담론 분석을 통한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 담론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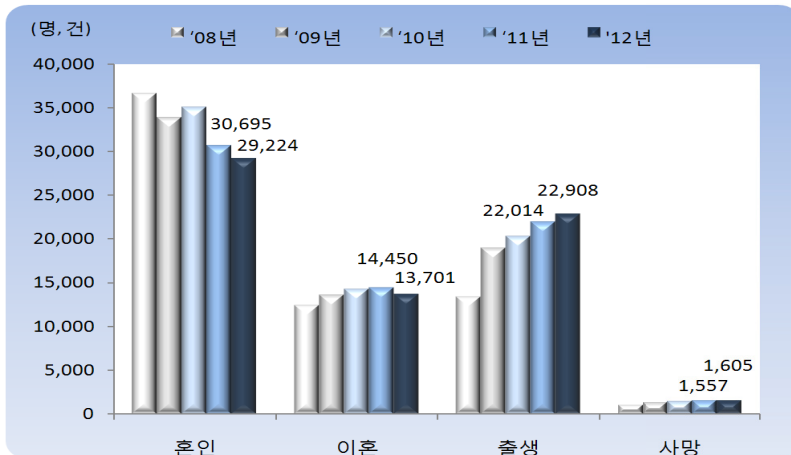
구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주요명세
				%	
-장애아무 상 보 육 료 지원	43,317	40,226	△3,091	△7.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장애아 ○지원인원 : 14천명(종일보육 12천명, 방과후 2천명) ○지원단가 : 종일보육 394천원 방과후 197천원
-맞벌이 가 구 보육료 지원	45,448	-	△45,448	△100	※'13년 0~4세 전계층 지원에 따라 0~4세 보육료 지원 예산에 포함
-다문화가 정 보육료 지원	9,565	-	△9,565	△100	※'13년 0~4세 전계층 지원에 따라 0~4세 보육료 지원 예산에 포함 *양육보조금 예산에 다문화가정 지원(9억) 내역 포함
-농어업인 보육료	9,806	-	△9,806	△100	※'13년 0~4세 전계층 지원에 따라 0~4세 보육료 지원 예산에 포함
-시간연장 보육료 지 원	33,890	33,890	-	-	○지원대상 : 보육료 지원 대상자 ○지원아동수 : 53천명 ○지원단가 : 시간당 2,700원
-시간차등 형 보육시 범사업	-	3,800	3,800	순증	○광역 자치구 2곳 : 3,000백만원 ○시군구 2곳 : 800백만원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	5,073	5,073	순증	○3,710명×46천원×30일=5,07 3백만원
□ 어린이 집 기능 보 강	11,867	23,610	11,743	99.0	
□ 보육인 프라 구축	15,377	26,990	11,613	75.5	
□ 어린이 집 평가 인 증	6,026	6,668	642	10.7	
□ 어린이 집지원	78,207	150,445	72,238	92.4	
□ 가정양 육수당 지 원사업	102,646	880,950	778,304	758.2	

③ 이민정책과 이주자 현황의 변모 (도표)<sup>6)</sup>

다음은 국내 이민정책과 이주자 현황의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먼저 국내 다문화인구의 동태를 살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21일에 업데이트된 통계청의 201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2년에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다문화 혼인과 이혼은 감소하고 다문화 출생과 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다문화 혼인은 29,224건으로 전년 대비 1,471건(48%), 이혼은 13,701건으로 전년 대비 749건(5.2%)감소하여 다문화 혼인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국제결혼이 줄어들고 다문화 가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다문화 출생은 22,908명으로 전년대비 894명(4.1%), 사망은 1,605명으로 48명(3.1%) 증가하였다. 다문화 혼인·이혼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다문화 출생과 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하여 출생부터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할 다문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1] 한국 다문화 인구의 변화



6) 다음 자료는 통계청의 201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결과 보고서가 출처임을 밝힌다.

[표1] 한국 다문화 인구 동태 현황

## 〈다문화인구동태 현황〉

(단위 : 명, 천, %)

	전체			다문화					(다문화)비중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증감	증감률			
혼인	326,104	329,087	327,073	35,098	30,695	29,224	-1,471	-4.8	10.8	9.3	8.9
이혼	116,858	114,284	114,316	14,319	14,450	13,701	-749	-5.2	12.3	12.6	12.0
출생	470,171	471,265	484,550	20,312	22,014	22,908	894	4.1	4.3	4.7	4.7
사망*	255,505	257,503	267,3352	1,506	1,557	1,605	48	3.1	0.6	0.6	0.6

\* 외국인 사망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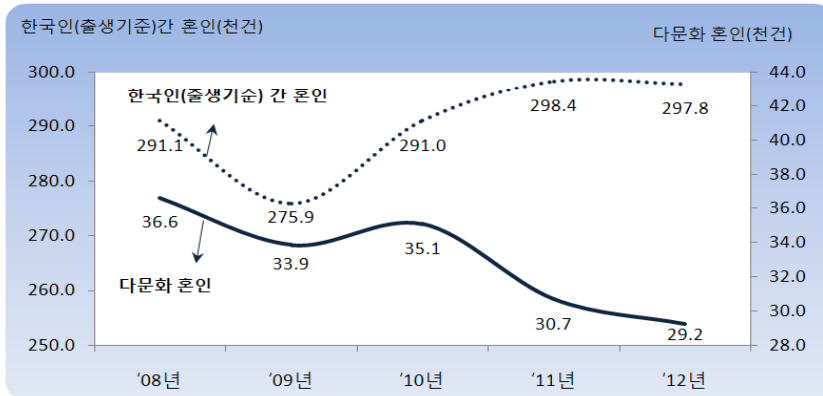
[그림1]과 [표1]은 다문화인구의 동태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그림1]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다문화 인구의 혼인, 결혼, 출생, 사망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보여주고 있으며, [표1]은 한국 다문화인구의 동태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다문화 혼인은 29,224건으로 전년(30,697건)보다 1,471건(4.8%) 감소하였다.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0.6% 감소하였고,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이 0.2% 감소한데 비해 다문화 혼인은 4.8% 감소하였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8.9%로 전년(9.3%)보다 0.4%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이혼 또한 5.2%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문화 출생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4.1의 증감률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망 또한 3년간 3.1%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1]과 [표1]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자면, 한국에서의 다문화 혼인과 이혼은 감소했고, 다문화 출생과 사망은 증가하였다.

[표2] 혼인건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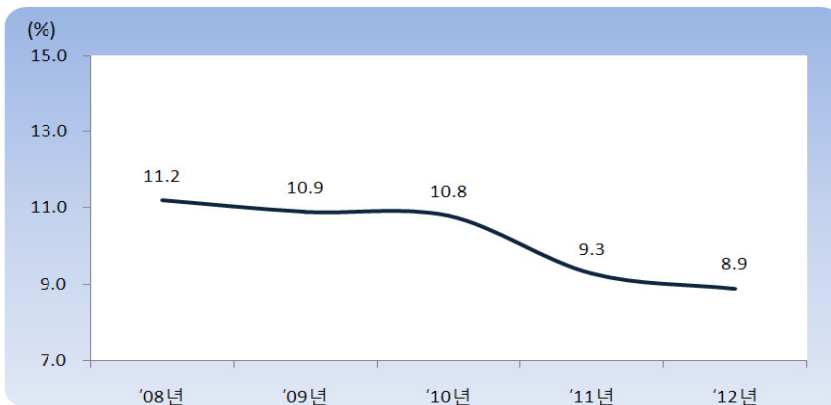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다문화 혼인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혼인건수	326,104	329,087	327,073	35,098	30,695	<b>29,224</b>	291,006	298,392	297,849
(비중)	(100.0)	(100.0)	(100.0)	(10.8)	(9.3)	<b>(8.9)</b>	(89.2)	(90.7)	(91.1)
전년 증감	16,345	2,983	-2,014	1,236	-4,403	<b>-1,471</b>	15,109	7,386	-543
대비 증감률	5.3	0.9	-0.6	3.7	-12.5	<b>-4.8</b>	5.5	2.5	-0.2

[그림2] 혼인건수 추이



[그림3] 전체 혼인 대비 다문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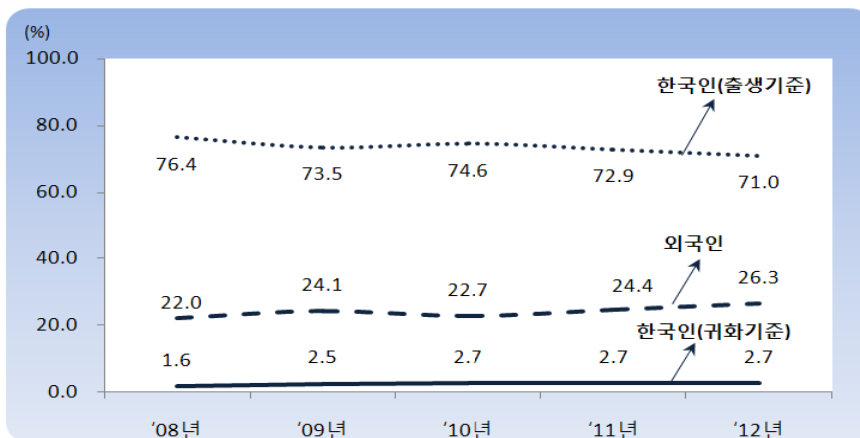
[표2], [그림2], [그림3]은 다문화 결혼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결혼 횟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에 한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의 혼인 건수는 감소한데 반해 외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의 혼인건수는 증가하였다. [표3]과 [그림4]는 다문화 결혼과 한국인(출생기준) 남성, 외국인 남성, 한국인(귀화기준) 남성의 결혼을 조사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표3]를 살펴보면 출생기준 한국인 남자는 전년 대비 7.2%, 귀화기준 한국인 남자의 혼인건수는 6.2% 감소한 반면에 외국인 남자의 혼인건수는 2.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다문화 유형별 규모 및 비중

(단위 : 건, %)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증감률
다문화	35,098	100.0	30,695	100.0	29,224	100.0	-4.8
한국인 (출생기준)	26,182	74.6	22,363	72.9	20,753	71.0	-7.2
외국인	7,961	22.7	7,497	24.4	7,688	26.3	2.5
한국인 (귀화기준)	955	2.7	835	2.7	783	2.7	-6.2

[그림4] 다문화 유형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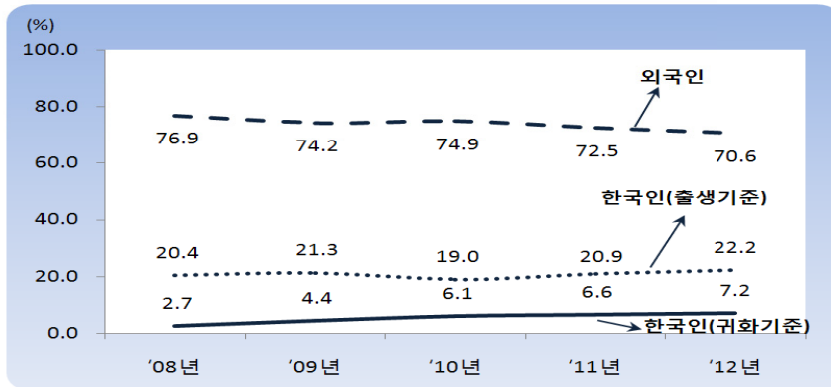
[표4]와 [그림5]는 다문화 결혼과 한국인(출생기준) 여성, 외국인 여성, 한국인(귀화기준) 여성의 결혼을 조사하고 통계, 비교한 자료이다. 이를 보면,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전년대비 7.3% 감소한 반면에 출생기준 한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2%, 귀화 기준 한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4.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4] 다문화 유형별 규모 및 비중

(단위 : 건, %)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증감률
다문화	35,098	100.0	30,695	100.0	29,224	100.0	-4.8
한국인 (출생기준)	6,685	19.0	6,409	20.9	6,485	22.2	1.2
외국인	26,274	74.9	22,265	72.5	20,637	70.6	-7.3
한국인 (귀화기준)	2,139	6.1	2,021	6.6	2,102	7.2	4.0

[그림5] 다문화 유형별 비중 추이



[표2]에서부터 [그림5]의 자료는 연령과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 다문화 결혼을 통계 분석한 자료였으며 다음 자료는 앞의 자료를 남성과 여성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것이다. [표5]와 [그림6]는 한국인 남성의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석한 자료이다. 2010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20대 후반의 외

국인과 한국인(귀화기준) 남성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였고, 30대 초반 남성의 경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출생기준)은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혼인건수는 감소하고 30대 초반 이하와 45세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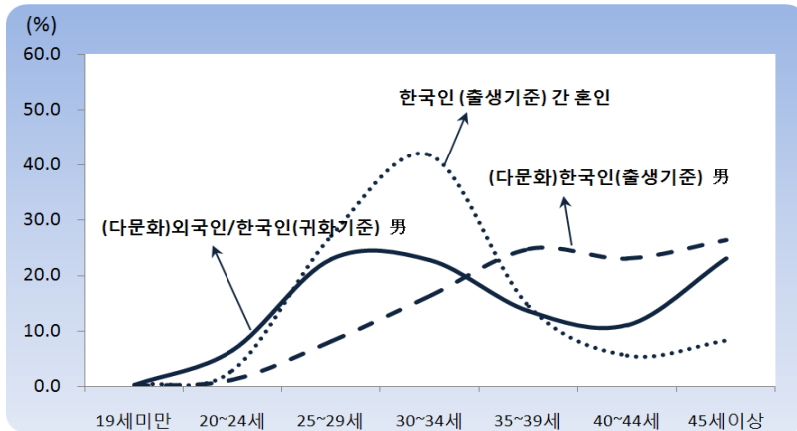
[표5] 남자의 연령별 혼인건수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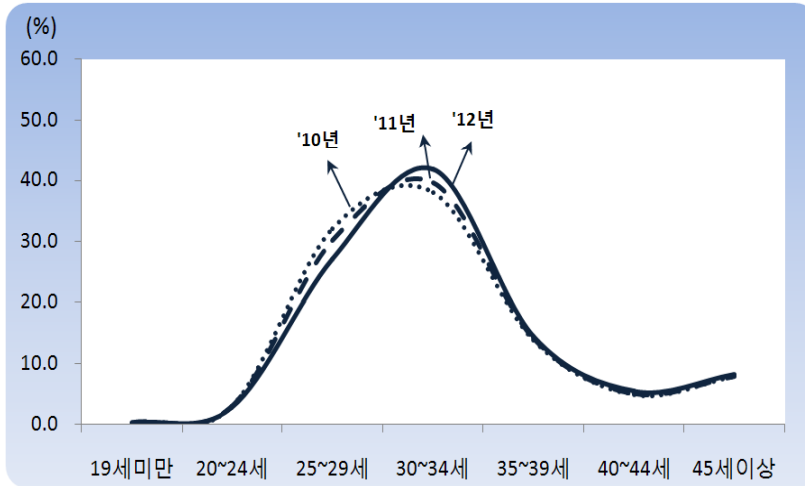
	전 체			다문화 혼인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		
				외국인·한국인 (귀화기준)			한국인 (출생기준)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세이하	0,2	0,2	0,2	0,1	0,1	0,1	0,3	0,3	0,2	0,0	0,0	0,1	0,2	0,3	0,3
20~24세	3,0	2,9	2,8	2,5	2,8	2,7	7,3	7,5	6,5	0,9	1,1	1,2	3,0	2,9	2,8
25~29세	29,7	28,4	25,7	10,4	11,9	12,4	20,1	22,8	22,9	7,2	7,8	8,1	32,0	30,2	27,1
30~34세	35,6	37,5	39,7	15,6	16,8	18,2	18,6	20,5	22,7	14,6	15,4	16,3	38,0	39,6	41,8
35~39세	15,0	14,9	15,0	24,3	23,1	21,5	14,9	13,9	13,5	27,5	26,5	24,8	13,9	14,1	14,4
40~44세	6,6	6,5	6,8	20,0	20,1	19,6	12,2	11,0	11,0	22,7	23,4	23,1	4,9	5,1	5,5
45세이상	9,9	9,5	9,8	27,0	25,2	25,5	26,6	23,9	23,1	27,1	25,6	26,4	7,9	7,9	8,2

[그림6] 남자의 다문화 유형 및 연령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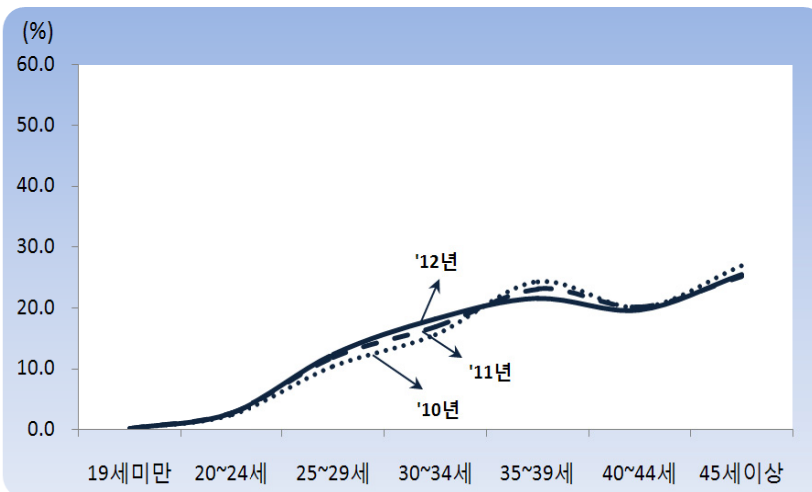
<2012년 다문화 유형>



〈한국인(출생기준)간 혼인〉



〈다문화 혼인〉



[표6]와 [그림7]은 여성의 다문화 혼인을 분석·정리한 것이다. 여성의 다문화 혼인 건수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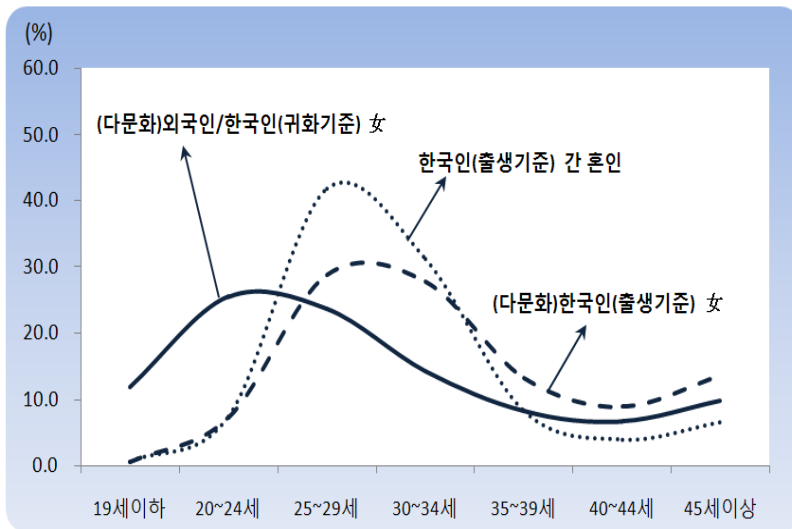
[표6] 여자의 연령별 혼인건수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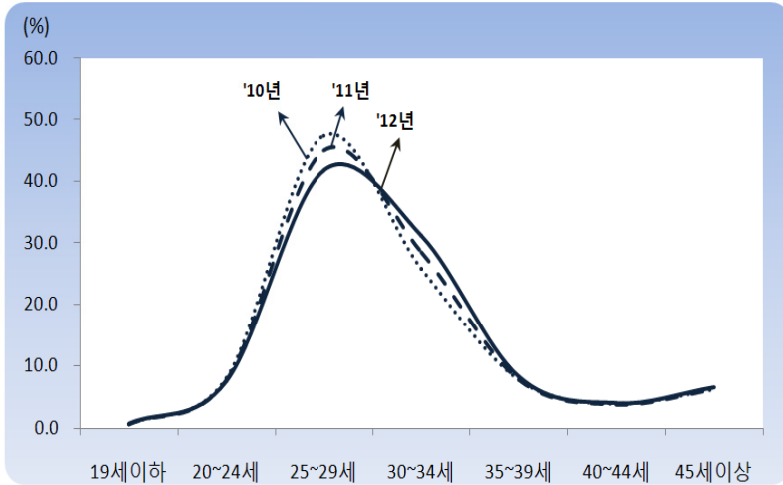
	전 체			다문화 혼인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		
							외국인·한국인 (귀화기준)			한국인 (출생기준)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세이하	1.8	1.6	1.4	11.1	10.0	9.4	13.6	12.5	11.9	0.5	0.5	0.6	0.6	0.7	0.7
20~24세	9.8	9.3	8.7	23.8	23.2	21.4	27.7	27.1	25.5	7.4	8.1	7.2	8.1	7.8	7.5
25~29세	44.8	43.1	40.3	22.8	24.6	24.8	21.1	23.2	23.7	29.6	29.8	28.7	47.5	45.0	41.8
30~34세	24.6	27.3	30.0	14.6	15.8	17.3	12.6	13.1	14.3	22.8	25.8	27.7	25.8	28.5	31.2
35~39세	8.1	8.0	8.3	10.4	9.7	9.3	9.2	8.5	8.2	15.5	14.1	13.3	7.8	7.8	8.2
40~44세	4.3	4.1	4.3	7.3	7.2	7.2	6.8	6.7	6.7	9.5	9.0	8.9	3.9	3.8	4.0
45세이상	6.6	6.6	7.0	10.0	9.6	10.6	8.9	8.7	9.8	14.6	12.7	13.5	6.2	6.3	6.6

[그림7] 여자의 다문화 유형 및 연령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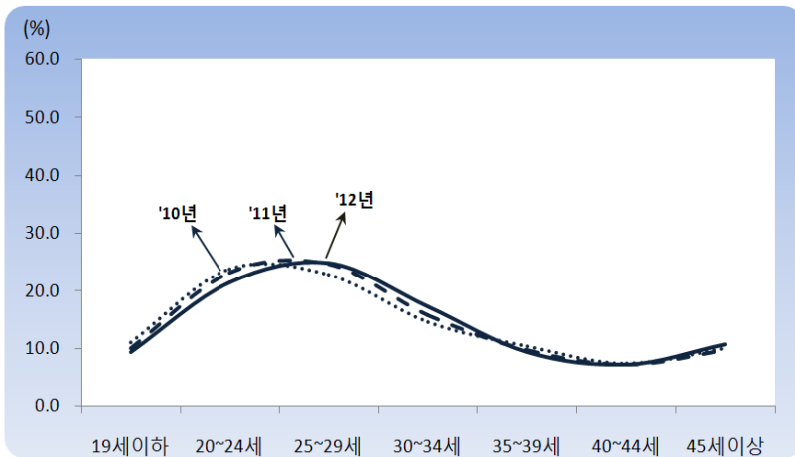
〈2012년 다문화 유형〉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별 비중도 또한 변화를 보인다. [표7]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자가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가 44.8%로 전년대비 3.2% 감소하고 동갑과 여자 연상 부부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인(출생기준) 남성과 외국인·귀화기준 한국인 여성의 혼인의 경우에는 ‘동갑’과 ‘여자 연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부부 연령차별 비중

〈다문화 혼인〉 (단위 : %)

		전 체								
					다문화 혼인			한국인(출생기준) 간 혼인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자 연 상	소 계	69.2	68.4	68.2	84.7	82.9	81.4	67.4	67.0	67.0
	1~2세	23.8	24.2	24.2	8.1	9.0	9.9	25.7	25.7	25.6
	3~5세	25.7	25.8	25.9	11.9	12.3	13.4	27.4	27.1	27.1
	6~9세	11.4	11.2	11.3	13.8	13.5	13.2	11.1	11.0	11.1
	10세이상	8.3	7.3	6.8	50.9	48.0	44.8	3.2	3.1	3.1
	동갑	14.4	14.8	14.7	4.0	4.4	4.9	15.7	15.9	15.7
여 자 연 상	소 계	16.4	16.7	17.0	11.3	12.7	13.8	17.0	17.2	17.4
	1~2세	10.8	10.9	11.1	5.2	5.7	6.1	11.5	11.5	11.6
	3~5세	4.0	4.1	4.3	3.5	4.0	4.5	4.0	4.2	4.2
	6~9세	1.3	1.3	1.3	1.7	2.0	2.1	1.2	1.2	1.2
	10세이상	0.3	0.3	0.3	0.8	1.0	1.1	0.3	0.3	0.3
	동갑	14.4	14.8	14.7	4.0	4.4	4.9	15.7	15.9	15.7

\* 연령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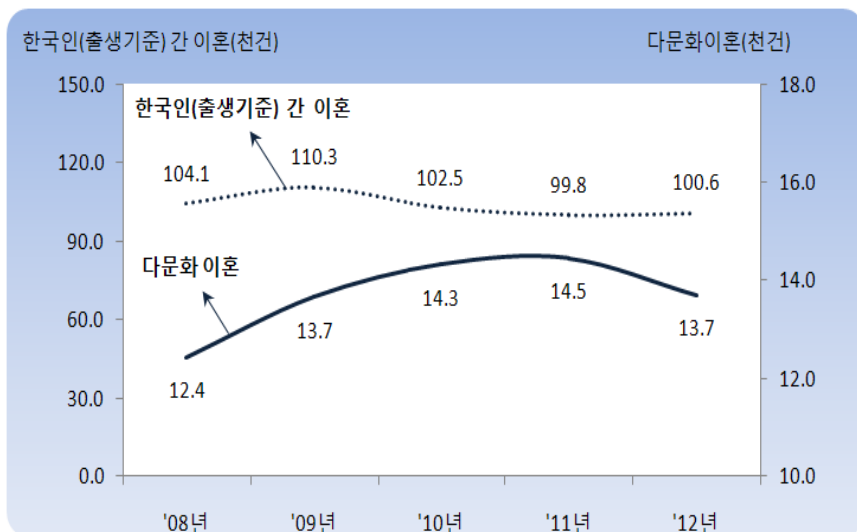
[표8], [그림8], [그림9]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이혼 건수 통계 분석 자료이다. 한국인(출생기준) 간 이혼 건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반면에 다문화 이혼 건수는 2011년 대비(14,450건) 2012년에는 5.2%(13,701건) 감소하였다. 전체 이혼에서의 비중도 다문화 이혼은 12.0%로 감소하였다.

[표8] 이혼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

	전체			다문화 이혼			한국인(출생기준) 간 이혼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이혼건수	116,858	114,284	114,316	14,319	14,450	13,701	102,539	99,834	100,615	
(비중)	(100.0)	(100.0)	(100.0)	(12.3)	(12.6)	(12.0)	(87.7)	(87.4)	(88.0)	
전년 대비	증 감	-7,141	-2,574	32	666	131	-749	-7,807	-2,705	781
	증감률	-5.8	-2.2	0.0	4.9	0.9	-5.2	-7.1	-2.6	0.8

[그림8] 이혼건수 추이



[그림9] 전체 이혼 대비 다문화 비중



[표9] 결혼생활기간별 비중

〈다문화 이혼〉

(단위 : %, 년)

		전체			다문화 이혼			한국인(출생기준) 간 이혼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년 미만	1년 미만	4.8	4.9	4.6	15.5	15.1	14.2	3.3	3.5	3.3
	1~3년	11.7	11.2	10.7	25.7	24.4	22.0	9.8	9.3	9.2
	3~5년	10.4	10.7	9.4	19.5	18.3	17.5	9.1	9.5	8.3
5년 이상~10년 미만		18.8	19.0	18.9	30.7	33.5	35.7	17.1	16.9	16.6
10년 이상~15년 미만		15.9	15.2	15.5	5.3	5.2	6.0	17.4	16.6	16.8
15년 이상~20년 미만		14.5	14.2	14.6	1.8	1.8	2.2	16.2	16.0	16.2
20년 이상		23.8	24.8	26.4	1.5	1.7	2.3	26.9	28.1	29.7
평균 결혼생활기간		13.0	13.2	13.7	4.7	4.9	5.4	14.2	14.4	14.8

[표9]에서도 다문화가족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조금씩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이혼 건수의 감소와 다문화가족의 평균 결혼생활의 증가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다문화 혼인은 29,224건으로 전년(2011년)과 비교했을 때 4.8%(1,471건)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혼의 경우에는 평균 혼인연령이 남성은 36.0세 여성은 26.9세를 기록하여 9.1세의 연령차를 보였다. 평균 결혼생활기간도 2010년에는 4.7년, 2011년에는 4.9년, 그리고 2012년은 5.4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부부를 구성하는 남녀의 학력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다문화 부부의 연령차가 감소하고 학력이 높아지는 등 국제결혼규제강화와 같은 다문화 건전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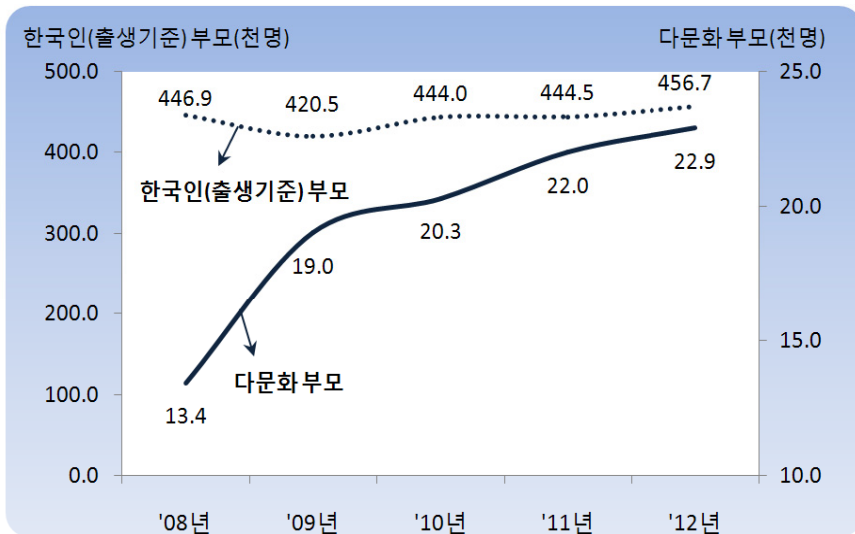
한편, [표10]과 [그림10], [그림11]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한국인(출생기준) 부모의 출생아가 전년대비 2.7%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22,908명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다.

[표10]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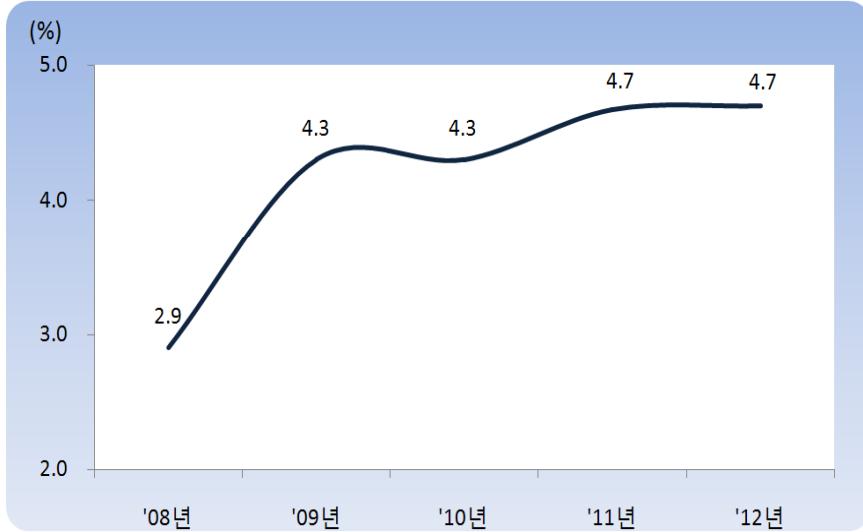
(단위 : 명, %, 여아 100명당 남아수)

		전체*			다문화 부모			한국인(출생기준) 부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출생아수		470,171	471,265	484,550	20,312	22,014	22,908	443,971	444,476	456,665
(비중)		(100.0)	(100.0)	(100.0)	(4.3)	(4.7)	(4.7)	(94.4)	(94.3)	(94.2)
전년 대비	증 감	25,322	1,094	13,285	1,288	1,702	894	23,450	505	12,189
	증감률	5.7	0.2	2.8	6.8	8.4	4.1	5.6	0.1	2.7
남 아		242,901	242,121	248,958	10,424	11,300	11,745	229,219	228,228	234,521
여 아		227,270	229,144	235,592	9,888	10,714	11,163	214,752	216,248	222,144
출생성비		106.9	105.7	105.7	105.4	105.5	105.2	106.7	105.5	105.6

[그림10] 출생아수 추이



[그림11] 전체 출생 대비 다문화 비중



[표11]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현재 한국의 다문화 인구(Multicultural Population)는 1,445,631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다문화 인구의 구성 비율에서 거주 외국인(Foreign Resident)은 1,120,599명, 귀화자(Naturalize Resident)는 133,704명, 다문화 아동(Children with Immigrant Background)은 191,328명이고 그중 6세 이하는 116,696명으로 다문화 아동인구의 61%를 차지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매년 다문화 아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서 추론하건대 향후 2, 3년 내로 다문화 취학아동의 수는 대한민국 전체 취학 아동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 출신의 아이를 위한 특별 교육이나 이들과 수업을 함께 하게 될 다른 아이들을 위하여 한국 교육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해본다.

② 다문화가족 지원법(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다.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현황은 281,295가구이며 이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3,568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혼인 귀화자는 83,929명으로 여성이 79,665명, 남성이 4,264명이다. 결혼이민자는 147,591명으로 여성이 126,704명 남성이 20,887명이다. 결혼을 통한 귀화자와 이민자에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 □ (통계 4)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가. 통번역

12.09.25 기준

통번역			
통번역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265	12	227	26

방문교육지도사수			이중언어			언어발달
한국어	부모	자녀	이중언어	이중언어 전일제	이중언어 반일제	언어발달
1559	1051	531	120	86	34	173

나. 사회통합

12.03.06기준

사회통합	독립				병합
사회통합	다문화 단독	독립형 (법인 동일)	법인상이	다기능	병합형
58	83	40	8	24	52

④ 한국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2009년에 개정된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목은 사회, 영어, 국어, 도덕, 역사, 기술과 가정이 있다. 교과서에는 “북한의 삶과 새터민의 삶 이해”, “편견극복과 관용”, “문화의 다양성”,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문화 지역”이 소개되었다.

다문화는 더 이상 어떤 목표지점이 아닌 현실이다. 정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발전시키고 외국인 이주민들과 정주민들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을 개발해야한다.

### 3. 한국에서의 반다문화주의

#### 3.1 민족주의의 제 삼의 도래와 반다문화주의

민족주의 상상계(National Imaginary)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의 발생은 반다문화주의의 발생과 연계되어 있다. 민족주의의 힘은 국민국가의 경계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실효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국민국가의 형성기와 제국주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세계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세방화의 일환으로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다문화주의는 민족주의와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지만, 반다문화주의의 부상과 논란은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주의란 일반적인 의미의 민족주의는 아니고, 세계화와 세방화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스펙트럼을 넓고 다양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다양한 각색과 변용이 가능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국가는 건재하고, 각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세방화 시대에서 민족주의의 배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와 그 반작용으로 부상한 반다문화주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민족주의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 최근의 반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현상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반다문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 죽음’ 역시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의 부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 과제는 호주 학자 톰 네른(Tom Nairn)의 논문에 주목한다. 네른은 세계화(Globalism)을 “세 삼의 물결”(The Third Coming of Nationalism)로 설명한다. 네른은 지구사에서 민족주의의 발생을 첫 번째 도래와 두 번째 도래와 세 번째 도래와 분류한다.

민족주의(nationalism)의 이야기는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ies)의 이야기와 구별되며 국민국가의 지위와 국민의 신분(nationhood)과도 구별된다. 민족 정체성, 독립국가의 지위, 민족 해방은 18세기부터 강력히 스스로를 주장했으며 다른 계몽주의 주제들과 관련 있다. 민족주의는 보불전쟁, 미국 남북전쟁, 이탈리아와 독일 연방의 형성 이후 1870년대에 나타나서 같은 과정으로 늦게 발전했다. 비록 1차 대전을 통해 1870년대의 제국주의의 절정에서 세계도처에서 재생산되었다 할지라도, 민족주의는 하나의 거대국가(a great nation)이며 지상주의자(supremacist)의 이상이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 학자들의 예언과는 반대로 1989년 이후 세계화의 상황에서 다시 나타났다.

민족주의와 반다문화주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이 과정은 민족주의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여 민족주의와 반다문화주의와 관계를 도출하려고 한다.

민족주의의 첫 번째 도래는 18세기 보불전쟁, 남북전쟁, 이탈리아/독일 연방 형성기에 하나의 담론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가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민족주의는 오늘날까지, 즉 민족국가 형성기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남아있다. 이는 일차 세계대전을 통해 1870년대의 제국주의 절정기에 세계 도처에서 재생산되었다.

민족주의의 두 번째 도래는 제 2차 세계대전의 불안정한 극우적 성향에서부터 발생했다. 무솔리니(Benito Mussolini)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중도를 표방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극우적 성향(fascism)이 강하다. 민족주의의 세 번째 도래는 세계화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의 이름 속에 사실은 민족주의가 숨어 있는데 그 속에서 민족주의가 부흥/부상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란 민족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나 개별된 것이 아니며, 세계화 자체가 민족주의를 품고서 내세워진 것이다.

리아 그린필드(Liah Greenfeld) 교수가 『자본주의 정신』에서 논의했듯이, 민족주의는 우익-자유주의 혹은 좌익 이데올로기가 부여한 것보다 항상 훨씬 더 중요했다. 민족주의는 좀 더 깊고 구조적 수준에서의 진보와 관련 있다. 경

제 성장과 성공은 추상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며 일반 경제 원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은 구체화를 요구했던 불공평한 발전을 수단으로 발생했고, 이러한 사회적 징후는 국가적 형태를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린필드 교수가 『내셔널리즘: 모더니티에 이르는 5가지 길』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런 징후는 특징적으로 좀 더 크고 지배적인 국가적 사회들(national societies)이다.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소수의 혹은 방관적 민족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국가적 사회들은 지도자나 유사한 라인을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기적 작용이 되었다. 이 말이 옳다면, 이러한 주기적 기계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사실상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기계는 좀 더 지구적 규모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전에 전개되었던 것보다 더 큰 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른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민족주의(내셔널리즘 nationalism)의 ‘주의’(ism)이다. 즉 우리는 국가 정치학의 명확한 표현과 공식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실을 예리하게 묘사하고 막연히 일반화될 수 있는 신조나 독트린으로서의 국가적 관심사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서 너무 쉽게 흘러나올 수 있는 말이다. 민족주의는 인기 담론이 되었으며, 모든 땅의 타블로이드 신문은 민족주의를 싫증 내지 않는다. 정치가들의 모든 그림자는 어깨에 민족주의를 지고 다니며, 모든 문화권의 대학들은 민족주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경력을 굳건히 하곤 한다. 세계화 이후, 예전처럼, 민족주의는 징후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권리의 선언’ 등은 18세기부터 상식이 되었고, 물론 국가들의 출현시기와 1848년 실패한 유럽혁명시기에 최고점에 달한 그런 성명서는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여전히 1848년도에 상식적 통용이 아니었다. 민족주의는 사실상 상륙했으며 흥미롭고 관련 있는 이유로 곧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담론이다.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론을 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부상한 반다문화주의의 담론의 이론적 혹은 발생학적 배경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들

의 상관관계를 네른의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호주의 존 하워드(John Howard)의 이라크 침공은 이성의 외관과 이름으로 가장된 공격이다. 이라크 공격을 위해서 스펙터클한 거짓말이 워싱턴, 런던, 캔버라에 상연된다.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국가의 우위라는 전쟁의 멜로드라마이며 1차, 2차 대전처럼 그들의 공격은 이런저런 보편성이라는 심령체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석유의 역할이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하지만 그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민족주의의 기능은 모호하지 않다. 이 때 밑바탕이 된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이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민족주의적 패권주의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보수주의라는 미국 주도의 민족주의는 결국 미국적 정체성과 국가적 책임감의 붕괴로 이어졌고, 부시이즘과 이라크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라크 침공 이후 지구 곳곳에 폭동과 테러가 발생하고, 이런 폭동과 테러 대부분이 이주, 인종, 민족,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구의 다문화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의 세계화 현상에 따른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인종적 혹은 다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오늘날 다문화주의 비판이나 다문화주의 반대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족주의가 가져온 거대한 움직임과 전쟁과 폭동과 전쟁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부흥을 이미 목격한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주의시대의 민족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시대의 민족주의는 과연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성찰과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민족주의의 형태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이주와 이민과 다문화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껴야 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다양한 이유



로 이주와 이문이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현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화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과 같은 경제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눈앞에 첩첩이 산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민족국가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표보다 더욱더 극복하기 힘든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역시 단일 민족국가라는 민족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일 민족국가의 이상은 민족의 신화적 토대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수천 년에 걸쳐 이룩한 대한민국이라는 상상 공동체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와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는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2 다문화 민족주의

그간 이주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민족국가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전제로 이해되었다. 여러 학자들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를 입증하듯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가 국가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자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세방화-다문화라는 전 지구적 사회적 배경에서 다문화주의는 민족주의의 안티테제로 이해될 수는 없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민족주의가 대두되어, 다문화주의 시대에 민족주의적 경쟁이 아니라 상생적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민족주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벤 피치(Gen Picher)와 타리크 모두드(Tariq Modood)이다. 이들은 국가 정체성에 있어 민족주의가 다문화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쟁과 정책적 비판은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담론과 연계해서 논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에서의 탈민족주의 담론은 일정 정도 다문화 현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서 탈민족주의는 다문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국민국가 내부의 문제점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민족주의 담론에 의하면 민족주의와 근대 민족국가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억압적이다. 임지현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에서 민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인종적인 것 혹은 종족적인 것으로부터 시민적 혹은 공공적인 것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ethnic nationalism”에서 “civic nationalism”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8).

하지만 최근의 몇몇 사례들은 인종적 민족주의든 시민적 민족주의든 민족주의의 허점을 심각하고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민적 민족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을 포함하여 인종의 초월한 다문화적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추구도 근래 심각한 비판의 대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11 테러’와 유럽 각국에서 열병처럼 불었던 ‘다문화주의 실패론’일 것이다. 2001년 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에서의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보여준 신보수주의적 반응은 시민적 혹은 공공적 미국식 민족주의의 배타성과 폭력성이 노골적으로 전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탈민족주의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에 이른다. 9/11 이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미국식 시민적 민족주의 범람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기반으로 시민혁명을 추동한 시민적 민족주의의 이면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폐단은 시민적 민족주의나 혈통 혹은 종족적 민족주의 사이의 구별도 철회할 만큼 시민적 민족주의는 배타성과 폐쇄성의 측면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9/11테러 이후 민족주의가 던져주는 세계사적 성찰의 핵심이다.

탈민족주의 시대의 민족주의로의 회귀는 민족주의 자체가 지닌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을 강조한 것으로, 세계화시대에 민족주의의 새로운 도래라는 톰 네른의 ‘제 삼의 도래’와도 연결된다.

민족주의 대 세계시민주의의 양자택일적인 이원론의 무익함을 벗어나 이들 사이의 상생적 매개와 결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문화와 반다문화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민족주의 대 세계주의의 대

립을 넘어서서 그리고 다문화 대 반다문화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적 협력질서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공공성을 정립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우선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각각에 맞는 정책적 대안과 담론을 제공한다.

### 3.3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특수성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의 프레임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도 있다. 한국사회가 백의민족과 홍익인간과 단일 민족을 국가 발생의 신화적 토대를 설정한 이상, 단일 민족 국가의 프레임을 초월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은 처음부터 다문화와 다인종 국가였던 점을 비교해본다는 이들 나라에서의 다문화주의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서구 여러 나라의 다문화주의와는 발생학적으로 질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는 한국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실행되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큰 세계화의 물결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으로 이주와 이민을 받아들였다. 한국 국적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주와 이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와 이민도 점증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와 이민에서는 한국 사회가 지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와 ‘이주 결혼 여성’과 ‘외국어 선생님들’이 다문화의 대상자들이었다. 이주 노동자와 이주 결혼 여성과 외국어 선생님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 산업구조가 지닌 약점을 보충하기 위한 인력이며, 이주 결혼 여성들은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문제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며, 외국어 선생님들은 영어라는 언어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다. 그 외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이주와 이

민을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여러 가지 필요로 구성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담론을 펼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과 정주민에 대한 인식을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국에서 이주와 정착의 역사가 서구의 여러 나라와 다르고 그 필요성이 질적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깊은 토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주민과 정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를 주체로 인식하는 대안적인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팽배해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이주민과 정주민을 주체로 인식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실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적 실행을 위해서 이주민과 정주민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다문화와 반다문화의 대립과 갈등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적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다문화와 반다문화의 갈등이 논쟁으로 거치지 않고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한국적 다문화주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민족과 국가와 세계 시민과 같은 경계를 지정하거나 경계를 허무는 용어가 난립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반다문화주의까지 통섭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계발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현상과 반다문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일 것이며, 그다음은 각 현상에 대한 이념적 정립과 대안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섭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한국적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이민자 및 토착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및 담론이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권리 운동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시민운동이기도 하다.

이주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다문화주의가 여러 가지 반대로 시행착

오를 겪자 그 대안과 반작용으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주와 다문화는 양극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민족국가 원칙에의 도전이다. 일부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로 인해 민족주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며 다문화주의를 자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상생 개념이 될 수 있는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는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이며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주의는 제삼의 도래를 끌어낸 강력한 담론이다. 또, 민족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하는 태도가 있다. 현재 ‘다문화 민족주의’(multicultural nationalism)라는 개념도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세방화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논하는 입장이기에, 다문화 민족주의를 다문화와 반다문화현상을 아우르고 한국적(로컬리티) 다문화주의로 한 입장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극우 민족주의의 도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무시하면 유럽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폭동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막강하다. 21세기 폭동과 테러의 대부분은 인종을 포함한 다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다문화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은 비단 서양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적 토대가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의 문제는 다문화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복지국가로서의 경험의 부재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이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는데 반영되어야지만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낳을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아직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성장과 분배와 복지의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다문화 시설의 확대는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논쟁을 타개하고 한국적 다문화 담론을 형성

하기 위해 서구의 다문화 모델을 규범적으로 따르지 않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다문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 3.4. 반다문화 현상

한국에서의 초창기 반다문화 논의는 온라인상에서 블로그와 카페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다문화주의의 스펙트럼 또한 다채로워지고 있다. 반다문화 시민단체, 반다문화 집회와 시위, 반다문화주의를 연구하는 학계,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반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에 제기된 한국에서의 반다문화 현상은 본 연구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반다문화 현상과 반다문화주의 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들의 주장 중에서 설득력이 있거나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까지 담을 수 있는 다문화 담론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다문화 현상과 담론에의 주목은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 3.4.1 노동의 문제를 제기한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면서, 3D 관련 노동현장의 문제를 타개할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노동환경개선, 사회복무제도 도입, 제대 군인의 3D 업체 취업 유도, 3D 가산점제, 공무원 임용자에게 3D 업체에 1년 의무 근무제, 3D 업종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교육 및 취업 구조개선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의존도를 줄이기 등.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들 중 노동환경개선의 문제는 국가경쟁력과 인권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노동환경의 개선과 국가산업구조의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창조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질적 개선책일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와 경제의 구조도 함께 변해왔듯이, 세계화 세방화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노동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경제 구조 개편과 취업구조 개편

은 다문화와 이주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문화의 문제는 비단 다문화 현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혹은 체질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 3.4.2. 국민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여 인종 간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종갈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2011년 7월 노르웨이 테러사건과 2011년 8월 영국에서의 폭동은 최근의 다문화 현상의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문화 현상으로서의 이러한 테러와 폭동은 서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문화 관련 집회와 시위가 현실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다.

서유럽에서의 다문화 관련 폭동 등이 주로 인종적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우리 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되면 인종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문화 상호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인종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호교류가 활발해진 문화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 3.4.3. 소수자 권익의 오류를 지적한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반을 폭행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수자 인권 보호와 불법체류자를 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반에게 총기 소지권과 발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처벌하여야 한다. 불법 체류자 단속반원수를 대폭 증가를 주장하며, 불법 체류자 전원 추방을 주장하기도 한

다. 또한, 불법 체류자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삼권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관련된 법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의 문제는 인종과 담론과 정책을 초월한 상의의 개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 3.4.4. 언론보도의 편파성을 주장한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은 한국 언론이 반다문화 사례를 지나치게 과장 보도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가해자가 되는 사건은 축소 내지 은폐하고 그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만 과대 보도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편파성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

#### 3.4.5. 다문화 관련 법

반다문화주의자들은 인종차별 금지법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을 별개의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고 복지 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수준 차이와 정주민의 양극화로 인한 생활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지원법과 예산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3.4.6.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

다문화주의의 한 현상으로서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는 예상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는 당연히 외국인 범죄자들의 교도시설의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서유럽에서도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를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를 이유로 반다문화 논의를 전개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의 절반을 넘는다(53%). 스위스는



외국인의 심각한 범죄율 때문에 다문화에 비관적이다. 스위스의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암슈투트(스위스 국민당 국회의원): 범법자 난민과 외국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우저(이민청 난민, 망명국장): 새 난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베른시민: 요즘 밤에는 여자들은 혼자시내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 범죄조직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매치기도 하고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범죄율과 조직 폭력단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개청식을 한 천안 외국인전담교도소와 노르웨이 바스토이(Bastoy) 섬 교도소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①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

2010년 2월 23일 법무부에서는 세계 최초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의 개청식을 열었다.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인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는 기존 천안 소년 교도소를 전환한 것이다. 한국의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을 개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 개청식에는 국내 저명인사들 뿐 아니라 주한필리핀 대사, 주한방글라데시 대사,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등 19개국 주한외교사절 20명이 참석하였다. 세계 최초의 외국인 전담교도소이니만큼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는 국내외에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에서 외국인수용자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는다. 외국인수용자들은 한국 전통 악기를 배우거나, 한복 입기 체험, 서예, 한글교육, 한국 문화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수형자들에게는 또한 문화차이를 배려하여 2가지 식단의 식사가 제공되며,

자국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고, 개청식 때 기부 받은 외국어 교양도서 5,600여 권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수형자들에게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정의 달(5월)과 연말연시에는 자국에 있는 가족과 무료로 국제전화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천안교도소는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돕는 교정시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안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개개인에게 특성에 맞는 교정처우를 받고 있다. 수용자들에게는 학과교육을 통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도 부여되며, 방송통신대학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 특별히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치료, 전문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특별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문화예술인 등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교양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수형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형기 종료 또는 가석방 등의 사유로 출소하는 외국인인 석방 당일 본국으로 강제출국이 된다. 시설에서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원예, 배관, 이용 등 3개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전담교도소에 대한 반다문화 단체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반다문화 단체에서는 군대시설과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시설을 비교하는 등,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외국인의 인격존중과 다문화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인 역차별 현상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반다문화주의자들은 한국인들이 지급하는 세금이 외국인 범죄자들을 위한 시설에 사용된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2013년 1월 중국인 살인범 오원춘이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수용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를 향하여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대거 쏟아지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면서 동시에 비난거리로 도마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반다문화단체의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번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전체에게 번지는 태도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 외국인 전담교도소 내부 모습과 식단. 출처: 조선닷컴

## ② 노르웨이 바스토이(Bastoy) 섬 교도소

노르웨이의 베스토이 섬 교도소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대략 동남쪽으로 7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이 섬을 취재한 영국 가디언즈(the Gaurdians)의 기자 어윈 제임스(Erwin James)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상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노르웨이의 인구는 500만 명에 지나지 않으며 범죄자 수가 4천 명 이하인 반면 영국은 범죄자 수가 8만 4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바스토이 섬 교도소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죄자들에 대한 노르웨이인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처벌은 ‘자유의 박탈’뿐이다. 각 수용실에는 텔레비전, 컴퓨터, 샤워시설과 위생시설이 완비되어있다. 수용자들에게는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

바스토이 섬 교도소에 밝은색 페인트칠이 된 목조형 방갈로는 한 채당 최대 여섯 명이 머물러 지낸다. 집마다 수형자들은 모두 개인 방을 갖게 되고 부엌과 다른 시설들은 공유한다. 식당에서는 오직 한 끼의 식사만 제공된다. 수형자들은 매일 대략 6파운드를 벌고 매달 식사비로 약 70파운드를 받는다. 그들은 섬 안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 수형자들은 양을 치거나, 소, 닭을 키우고 과일 채소 등을 기르기도 한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자신의 식량을 상당 부분을 직접 재배하기도 한다. 세탁업, 말 사육, 자전거 수리, 정비업, 목재업과 같은 다른 일도 가능하다.



바스토이의 한 수형자 방갈로의 테크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다.  
사진 : 마르코 디 라로(Marco Di Lauro)

바스토이의 한 교도관이 말한다. “그들은 출소 후에도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몸에 익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섬에 있을 때가 오슬로의 거리를 걸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지요.”

노르웨이의 범죄자들은 형이 최대 5년까지 남았을 때 바스토이로 이감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살인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범죄자든지 바스토이 섬에 갈 수 있다. 그 조건은 바로 출소 후 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바스토이에서는 수용자들이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일반 교도소에서 는 그저 수형자를 노동, 요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책임감을 지우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감방에 가두었다가 풀어줄 뿐이다. 바스토이에서 수형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처벌은 자유의 박탈이다. 바스토이 섬 교도소장인은 말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들을 동물처럼 취급하면 그들은 정말로 동물처럼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들은 인간으로 대우합니다.” “사람을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형자들을 존중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형자들이 석방 후에 재범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위한 정의이지요.”

바스토이에서 석방한 이들의 재범률은 16%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07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석방된 수용자 14명의 재범률이 70%였다. 이는 범죄자에게 매년 약 40,000파운드를 투자했던 것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결과가 된다. 바스토이 섬 교도소 범죄자들의 생활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범죄자들에게 그런 호화스러운 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스토이 섬 교도소의 재범률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바스토이 섬 교도소 교도관의 말처럼 사회를 위한 진정한 정의란 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만하다.

#### 3.4.7. 외국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주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들과 ‘이주노동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勞組’ 결성을 돕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라는 명칭에서도 보듯,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내 체류를 ‘단기 체류’가 아니라 ‘이주’, 즉 ‘장기 체류’ 내지 ‘정착’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노동 3권 보장과 노조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8월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있는 A 교육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5명이 지난달 12일 연수구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24일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들이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자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한 한 외국인 강사가 보복성 징계를 받자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조를 결성했다"며 "설립 당시 5명이던 조합원 수는 현재 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2005년 4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노조원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라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돼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노조가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07년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관련된 투쟁을 정리한 것이다. 2003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맞선 380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이 있었다. 농성투쟁의 공동대표는 연행 두 달 만인 2004년 4월 1일 새벽 2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천공항으로 긴급 호송되어 오전 9시 홍콩 행 비행기에 태워졌다.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추방이었다. 이 당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성은 강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농성은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 산업 영역에서 다각화되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활동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샤말 타파씨의 뒤를 이어 농성단을 이끌었던 아노아르 후세인 2005년 4월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한 지 불과 3주 만에 지하철역에서 연행되어 1년 넘게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를 거부하고 투쟁을 전개해오다가 결국 지난 7월 26일 오전 9시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는 것은 그보다 몇 곱절 더한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의 위원

장을 맡은 까지만(43. 네팔) 씨는 위원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주조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누구도 이주노동자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설립신고 당시 노동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은 노조가입 자격이 없고, 이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노조로 볼 수 없다.”라며 신청서를 받지도 않았다. ‘산업 연수제’에서 ‘고용 허가제’로 바뀌었어도, 이주노조가 있어도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7년 말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9%, 임금노동자의 3.2%를 이주노동자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 열 명 중 두 명이 이주노동자이며, 이주노조 조합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 이주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였고, 이는 외국인 노조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통계표명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업종별 단위 : 명

		외국인근로자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고용 허가제	합계	3,167	31,659	28,976	33,687	75,024	63,323	40,457	49,210	51,730	
	제조업	3,124	31,115	28,182	30,181	65,871	55,351	33,545	40,481	43,775	
	건설업	0	84	42	740	3,326	4,296	2,498	2,208	1,269	
	농축산업	43	419	700	2,298	4,482	2,324	3,153	4,558	4,859	
	서비스업	0	41	52	48	48	54	53	116	134	
	어업	0	0	0	420	1,297	1,298	1,208	1,847	1,693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일반고용허가제는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이주 노동자들의 수적 증가와 이에 따른 노동문제의 심각화는 예상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노조와는 달리 이주노조는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노동권 문제에 집중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 법제도 문제, 임금협상,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노조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주 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주노조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조의 존재 자체가 이주노동자 운동의 커다란 성과였다. 이주노조가 출범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지부를 만들지는 못했다. 대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 진행 중인 곳은 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사진출처: 참세상.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교육,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차피 필요하고 써야만 하는 건데 3년 일하는 것을 6년 하면 왜 안 되냐는 주장도 있다. 3년이 지나면 한국말 더 잘 하고, 일 하는 것도 잘 알고 한국 사람과 지내는 방식도 더 잘 알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추방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일하고 싶다.” “더 오래 일하고 싶다.” “일 못하게 하는 법제도를 고쳐라.” “이것이 뭐가 잘못된 주장이고 어려운 요구인가?”는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동이나 금속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당장 어떤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속이나 건설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숫자가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이주노동자가 그들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나 건설, 금속, 일반노조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고 서로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전망은 밝다. 이와 관련된 신문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는 한국 노동자들의 인식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외국인 노조 관계자는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뺏긴다, 이런 이야기가 노조에서는 안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같은 노동자인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씩 한국 사람들도 차츰 알아가고 있다. 일자리 뺏기는 문제는 무엇보다 임금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노동자는 100원이면 이주노동자는 80원이니까 회사에서 이주노동자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임금이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싸움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같은 노동자로 회사에 요구하고 정부와 싸워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또 다시 20년, 이주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주노동자 운동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300만 이주노동자 중에서 100만 명이 미등록이다.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한국 노동계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한국이 더 다양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지닌 이해의 부족은 여전하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는 시각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노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라면 한국 사람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한 경험이 있지 않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돈 벌고, 일하러 온 사람이다. 어디든 돈 벌러 가면 똑같은 노

동자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었고, 지금 고용허가제에서는 이름만 노동자이지 노동3권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과 한국 정부에게 우리가 하는 요구이다.”라며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수적인 증가가 반드시 노동권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이미 예상된 문제이다. 이런 노동권의 문제를 예상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은 민족주의의 스펙트럼에서 부합되지 이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의 문제는 국민의 노동3권의 문제로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의 문제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4. 서구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실패론

### 4.1. 서구의 다문화주의 실패론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세에는 이슬람과의 이질적 만남과 교류가 있었고, 근대에는 제국주의의 바람을 타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과의 전 방위적 만남과 교류가 있었다. 유럽의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슬람과 식민지의 문제는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유럽의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특정 지역에서 협력적으로든 경쟁적으로든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현상을 다문화주의라고 명명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내는 단체들이 많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좋은 싫든 19세기 이후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다문화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전했던 유럽의 나라들은 전후 전쟁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유입하곤 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로의 이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서유럽은 1940년대 후반부와 1973년 오일 쇼크기에 전후 경제를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했다. 경제적 사이클이 새로운 노동자 수요를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유럽 15개국(EU 15)의 5 퍼센트에서 약 10 퍼센트의 시민들은 유럽이 아닌 지역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력이 강한 북서유럽은 비백인이 15에서 30퍼센트에 이른다(Moadd 4). 비 백인의 대다수는 무슬림들이다. 무슬림은 서유럽에서 대중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장점이며 단점이기도 하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된 결정적 몇몇 사건들이 무슬림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주라는 현상이 오랜 시기에 걸쳐 다각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담론으로 다문화주의가 부상하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각국은 다문화주의로 여러 인종과 문화와 종교 등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근의 사례와 지표는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2011년은 유럽 다문화주의의 분수령이 된 시기이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테러 사건, 8월 영국에서의 폭동,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독일의 다문화주의 실패론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는 관용이라는 관념적 차원에서 실행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법적, 사회적 권리 운동과 함께 발전해 온 왔다고 할 수 있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주와 호주가 서로 다른 방향성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담론으로 설정하여 정치적 시설을 갖추어 나갔지만, 최근에는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비롯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며, 다문화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단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은 신문 지상에 발표된 유럽을 비롯한 서양의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정리한 것이다.

#### ① 호주

호주의 시민권 취득 시험은 2007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18세부터 60까지의 모든 시민권 취득 희망자는 치러야만 하는 시험이다. 2007년 2월 하워드(John Howard)정부는 사회적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민성(DIMA: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에서 ‘다문화(Multicultural)’를 제거하면서 호주 이민성 명칭을 ‘이민 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로 바꾸었다. 그레고리 블레이니(Geoffrey Blainey)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측한 이익을 위해 호주를 거대한 다문화 실험실로 전환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다문화주의에서 한발 물러 선다.

## ② 영국

영국은 유럽 다문화주의의 가장 대표적 국가이며 영국의 이주자 문제와 다문화주의는 늘 다문화주의 연구의 한 예가 되어 왔다. 그간 영국의 이주사는 식민지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영국의 대다수 이주자들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영국 제국주의사가 영국 이주사와 인종문제에 대한 연구의 토대였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이주자 문제와 인종적 갈등은 다문화주의와 반이슬람주의의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이슬람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노동당 정부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영국성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노동당 정부는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과 런던 테러를 겪고 이슬람주의와의 맞서는 과정 중에서 다문화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주의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재구성하였다.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인종과 종교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사적 정치와 경제문제와 연계되면서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

영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에는 단연 큰 문제는 인종적 종교적 장벽이 있다. 영국은 1919년 이래로 총 31건의 인종 폭동이 일어났으며, 영국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은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인종 평등 위원회(CR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의 위원장이었던 트레버 필립스(Trevor Phillips)또한 진보주의자들의 영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미국의 이슬람 대테러 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영국 내 이슬람 이민자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영국 내 반이슬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서도 반이슬람이라는 인종 차별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슬람 혐오주의가 극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조장되었고, 제 이차 세계대전 이후 힘을 잃었던 극우 정당들이 기세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2011년 2월 7일 연합뉴스에 근거한 영국의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정

리한 것이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했다. 영국은 지난 30년간 이주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다문화주의 정책을 펴왔다. 야당인 노동당과 영국의 무슬림 단체들은 캐머런 총리의 발언을 "우파적 극단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2011년 2월 5일 열린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과거의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문화주의라는 원칙 아래 별개의 문화들이 주류와 동떨어져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며 "우리는 (이주자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만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무슬림들의 문화를 용인함으로써 영국에서 반(反)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관용(passive tolerance)'을 폐기하고, 이를 '능동적·근육질 자유주의(active, muscular liberalism)'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책을 통해, 영국에 살려는 이주자들이 영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근육질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제결혼 등 여성차별주의를 고수하는 무슬림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전액 삭감, 모든 이주자의 영어 사용 의무화, 학교에서의 영국 문화 교육 등을 들었다.

야당과 무슬림 단체는 캐머런 총리의 '다문화주의 폐기' 연설을 "이슬람 혐오주의를 확산시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영국의 무슬림 단체 '라마단 재단' 모하메드 사피크 대표는 인디펜던트에 "캐머런 총리는 무슬림을 사회 분열의 원흉으로 지적함으로써 무슬림 혐오주의를 퍼뜨리는 극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서로의 신념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는 영국인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사디크 칸 법무담당 대변인은 "캐머런이 연설을 통해 극우 단체들을 위한 선전 문구를 써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약 3.3%인 200만명에 달한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영국으로 이

주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캐머런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당장 보수·자민 연립정부 안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를 필두로 한 자민당 의원들과 보수당의 사이에다 와르시 의장 등은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종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연립정부 내부의 갈등은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무슬림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와르시 의장의 계획이 보수당 간부들의 반발로 무산됐을 때도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와르시 의장은 지난달 레스터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이슬람 혐오증이 영국 중산층까지 물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폭력이 양산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영국의 무슬림 단체들은 캐머런 총리가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이 극우 단체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극우단체인 '영국수호동맹'(EDL)이 영국 루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날에 이뤄져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연립정부가 이슬람권의 온건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이슬람 극단주의를 막는다는 '예방'(Prevent) 전략의 재검토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예방 전략은 영국에서는 비폭력을 호소하면서 해외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지원하는 무슬림 단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단체 '센트리'(Centri) 간부인 하라스 라피크는 캐머런 총리가 예방 전략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영국 지도자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2005년 런던 폭탄테러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영국의 관용 정신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 ③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인, 퀘벡인, 토착민 간에 또, 그 그룹 내에서의 갈등과 정체성과 민족주의 정책다문화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캐나다는 캐나다의 주류 문화와 소수민족 문화가 대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캐나다가 처음 지지했던 다문화 정책은 총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는 자국에 있는 모든 문화를 지지해 준다. 둘째, 캐나다 정부는 모든 문화 그룹의 일원들이 캐나다의 사회에 완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다. 셋째, 정부는 캐나다 내의 모든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국가적 결속력을 위하여 접촉하고 교류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모든 이주자가 캐나다의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중 적어도 하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캐나다의 다문화는 이러한 통합적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 대한 연구는 단일 민족 국가인 대한민국과는 사회적 배경이 상이하지만, 다문화 정책을 국민국가의 시작과 함께했기에,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의 변화상과 반다문화에 이르는 담론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들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민족 문화의 보존의 문제와 문화 교류와 변화의 문제가 상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다양성의 범위와 다문화적 포용의 강도는 이후의 연구에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④ 독일

2010년 10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 티로 사라진(Thilo Sarrazin)의 저서 『독일은 망한다』(Deutschland Schafft sich ab)는 독일의 전국적 논란은 초래했고, 급기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려는 독일의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한다.

다음은 2010년 10월 17일 로이터 통신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 남쪽의 포츠담에서 자신의 기민당(CDU) 청년 당원들에 행한 연설을 통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채 우리와 이웃해 살도록 허용하는 다문화 접근방식은 400만 무슬림이 살고 있는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메르켈은 독일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민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CDU 내부의 드센 요구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메르켈의 이번 발언은 자신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메르켈의 이번 발언은 보수 정당인 CDU 내에서 이민자 및 이슬람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켈 총리는 과거 이민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요구가 너무 적었다면서 그들은 학교 교육 이수를 위해 독일어를 배우고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독일 내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티로 사라진(Thilo sarrazin) 전 중앙은행장이 자신의 저서(『독일은 망한다』)에서 무슬림 이민자들로 인해 독일 사회의 지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난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사라진 은행장은 그러한 견해로 인해 비난을 받고 현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그의 저서는 커다란 인기를 끌었고, 독일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를 ‘다문화주의의 비극’으로 표현하면서 심각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는 다른 문화를 흡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네덜란드가 바로 그 한계로 인해 야기된 문제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한다.

#### ⑥ 프랑스

메르켈과 캐머런 이어 프랑스의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역시 반이민자 정책을 제시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 이어 니콜

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다문화주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부르카 금지법안을 성사시키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며 사실상 프랑스의 오랜 다문화 정책에 등을 돌린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에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하며 공식화한 것이다.

2011년 2월 11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최대 민영 방송 TFI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 "그것은 실패했다"고 분명히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물론 우리는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하나의 사회를 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만약 당신이 프랑스로 왔다면 프랑스라는 한 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프랑스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프랑스는 오랜 생활방식,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학교를 다닐 권리 등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들은 이민자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가라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쓰는 바람에 정작 그들을 받아준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번 다문화주의 실패 공식 선언은 사르코지가 지난해 실행한 일련의 반 이민자 정책과 연결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지난해 경제난과 실업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에 로마 불법 체류자 수백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출국시켰고, 9월에는 부르카 금지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둔 사르코지는 지난해 11월 개각에서는 아예 보수 일색의 내각을 꾸려 차기 대선에 대한 승부수를 띄웠다.

한편 이에 앞서 유럽 각국에서는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과 이로 인한 정책 선회 입장이 이어졌다. 지난 30년간 이주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지난 5일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며 "젊은 이슬람인들이 극단주의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해 "독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에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독일이 추구해온 다

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와 영국에서는 모든 이주자들이 영어를 쓸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들은 이주자들이 자국어가 아니라

### ⑦ 노르웨이

인종갈등이나 이주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 같던 노르웨이에서 2011년 90 여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 폭탄 테러와 9/11테러와 미국과 서방의 이라크 침공은 다문화주의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전 세계는 다시금 극우 민족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복지 선진국이라는 노르웨이에서도 자국민의 자생적 테러를 경험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의 다문화주의 실패론은 2011년 테러 사건과 연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테러는 일차로 오슬로 정부청사 앞 차량폭발로 시작되었고, 곧이어 집권 노동당의 청소년 캠프행사장에서 청소년들을 향한 무차별 총격으로 이어졌다. 테러범 브레이빅(Anders Behring Breivik)은 범행전 블로그에 1500쪽에 달하는 “2080: 유럽 독립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다문화주의가 유럽의 이슬람화를 진행시켰고, 자신의 범행동기가 이슬람화와 다문화주의에 있음을 밝혔다. 그는 다문화주의를 이슬람주의와 동급으로 유럽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르웨이에서의 다문화주의 실패론은 다분히 반 이슬람정서와 연계되어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철학자이나 반인종주의 운동가인 슬라예보 지젝(Slavoj Žižek)은 브레이빅은 급진좌파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의 다문화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이슬람주의라는 세 가지 정치 영역의 적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았다. 지젝은 그는 기독교를 옹호하지만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안티페미니스트라고 했지만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함으로써 반이슬람이라는 것 외에는 확고한 이념적 기반이 없다며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Gardian, 8 August 2011).

### ⑧ 유럽의회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에 동의를 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 이어 유럽회의의 수장도 '다문화주의 실패론'에 동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11년 2월 17일 보도했다.

토르보른 야글란 유럽회의 사무총장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 탓에 국가안에서 '별개 사회'(parallel society)들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일부 별개 사회는 위험하고 급진적인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글란 사무총장의 발언은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이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공식 선언한 뒤 나온 것이다. 이들 정상은 다문화 사회의 공존을 주창하는 접근법은 국가 정체성을 손상하고 젊은 이민자들의 과격화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히 캐머런 총리는 영국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단체에는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까지 밝혔다.

야글란 사무총장은 이들 정상이 다문화주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바람직한 '문화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사회 통합에 필요한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4.2. 반다문화주의 이론

### 4.2.1. 반다문화주의 담론 분석

다문화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도의 하나로써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외국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표방하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도해 온 캐나다에서 1990년대에 일어난 다문화와 반다문화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겠다. 이 고찰을 위해서 필 라이언(Phil Ryan)의 2010년도 역작인 『다문화 혐오증』(Multicultiphobia)의 내용을 분석하겠다. 이 책은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들을 충실하게 소개한 다음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반다문화 이론 고찰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 더욱이 이 책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를 펼치기 때문에 참고할 거리가 풍부하다.

캐나다 정부는 1971년에 다문화 정책을 최초로 국가 시책으로 공포하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다음인 1990년대에 캐나다에는 다문화 정책이 낳은 폐단을 공격하는 저작이 출판되었다. 라이언은 『다문화 혐오증』에서 네 권의 대표적인 저작을 소개하고 분석하는데 그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레지날드 비비(Reginald Bibby)의 『광기의 모자이크』(Mosaic Madness)가 1990년에 출판되었다. 이어서 닐 비쑤다쓰(Neil Bissoondath)의 『환상 팔기: 캐나다의 광신적인 다문화주의』(Selling Illusions: The Cult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가 1994년에 또 리차드 권(Richard Gwyn)의 『국경 없는 민족주의』(Nationalism without Walls)가 1995년에 출판되었다. 마지막으로 1998년에 잭 그라나츠타인(Jack Granatstein)의 『누가 캐나다 역사를 말살하였는가?』(Who Killed Canadian History?)가 출판되었다. 이 중에서 닐 비쑤다쓰의 『환상 팔기: 캐나다의 광신적인 다문화주의』와 라차드 권의 『국경 없는 민족주의』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이기 때문에 라이언은 이 두 권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라이언은 이 네 권의 책에서 반다문화주의자들이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공통적인 요소들 찾아내어 일별한다. 지금부터 라이언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반다문화 이론을 소개하겠다.

비비는 『광기의 모자이크』에서 상대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살게 되었다고 한탄한다. 진실 되고 올바른 것을 강조하던 과거는 가고 이제는 개개 관점과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결국 다원주의적 개인주의는 “각 문화 집단을 개별 모자이크 조각”(30)처럼 흩어버렸고 “상대주의는 도덕적 합의 정신을 말살하였다”(30). 사회의 각 조직과 기관들은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여 사회적 선을 창조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캐나다의 정부와 언론과 교육계와 종교계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비쑤다쓰는 『환상 팔기: 캐나다의 광신적인 다문화주의』는 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서이다. 이 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는 비쭈다쓰가 소위 ‘다문화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나이폴(V. S. Naipaul)의 조카라는 유명세를 가지며 동시에 그 자신이 서인도 제도에서 캐나다로 이민한 갈색 피부의 이주민이다. 이러한 비쭈다쓰가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니 그의 비판은 인종차별이라는 혐의를 완벽히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다문화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이민자에게 적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32)고 말하면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다문화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사회상이 없다. 둘째 그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관행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그 사회에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문화는 시간 속에서 냉동된다. 넷째 그 사회는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관점의 분산을 추구한다. 이러한 문제들 저변에는 다문화주의 사회의 “문화적이라면 그 어떤 것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기”(33)는 태도가 숨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보잘 것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구성원들의 정신과 영혼이라기보다는 전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34) 때문이다.

권의 『국경 없는 민족주의』는 캐나다인들이 과거에는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 헌신했는데 다문화주의가 공식화되고 난 이후에 역사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개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권이 보기에 다양한 다문화 집단은 다문화주의를 구가하지 않고 오히려 “단일문화주의”를 구가할 뿐이다. 왜냐하면 각 다문화 집단은 자기들만의 문화 관행을 실현할 뿐이기 때문이다. 파편화된 다문화 집단들은 자신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그 어떤 불평등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인들은 타협과 협동과 상부상조라는 캐나다의 전통을 망각하고 점점 더 사회적 갈등을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다”(36). 이러한 현상이 악화되면 결국 캐나다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의 힘을 잃고 더 이상 국가적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은 경고한다.

그라나프타인(Jack Granatstein)의 『누가 캐나다 역사를 말살하였는가?』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소수 민족을 차별한 역사만을 가르치지 캐나다란 국가와 국민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라나프타인 역시 다문화주의가 정체성의 냉동화와 분리를 촉진시킨다고 개탄한다. “다문화주의란 연방 정책과 캐나다에 대한 이민자들의 부족한 이해와 진보적 교육 관행이 상호 작용하여 결국 이주자들이 캐나다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40)는 것이 그라나프타인의 결론이다.

위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한 반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주의가 해롭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가 우선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문화에도 해악을 주며 결국 사회 전체를 해친다고 본다.

다문화주의가 사람에게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적 절대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순응성, 사회가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기대하기, 그리고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가지는 분노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문화주의 사회가 도덕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각 다문화 집단의 도덕 기준은 다른 다문화 집단의 도덕 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그 집단 안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주의와 순응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즉 각 다문화 개인은 다른 문화 집단에 속한 개인과 관계에서 독립적인 개인이지만 같은 문화 집단의 관행에 순응한다.

다문화주의가 그 사회의 문화에 악영향을 주다는 논리는 위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문화들을 시간을 초월하여 냉동시켜서 파편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문화를 개인의 정신을 형성하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키지 않고 오히려 문화를 전시 대상이나 문화 축제와 음식 박람회 거리로 전락시켜 버린다.

다문화주의가 사회에 유해한 이유는 다음의 것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만 집착하는 병든 역사인식, 공동체 중심의 상실, 단순한 공존, 문화 장벽 즉 분리주의, 분열된 충성심, 약화된 영어권 캐나다, 약화



된 집단생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다문화주의는 해당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리란 것이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들이 동의하는 점은 “다문화주의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인종차별”(42)으로 비난받는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비판점 중 하나이다.

#### 4.2.2. 다문화 혐오증 비판

다문화 혐오증 담론은 매우 단순화된 서술 구조를 가진다. 이를 라이언은 다문화 혐오증의 근원적 존재론(primitive ontology)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주자들이 다문화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의 관행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주 전 사회의 문화 관행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표현이다. 즉 문화가 지속한다는 의미를 아무리 사소한 문화 관행 하나라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근원적 존재론이다. 사실 다른 문화의 담지자들이 한 사회에 존재하면서 소통할 때 발생하는 것은 상호 변화이지 어느 일방의 변화가 아니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문화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고 유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적인 존재론이 가능하다고 믿는 데에는 “문화를 균질의 암석으로 보는”(45) 단순한 문화 이해가 기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문화를 돌기둥처럼 균질한 단일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럴 때야만 문화 관행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이 가능한 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순진한 믿음은 다문화주의가 이민자들이 문화 관행을 변경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기초가 된다.

다문화 혐오증이 혐오하는 대상은 우선적으로 1971년에 선포된 다문화 정책이다. 그런데 이 다문화 정책은 사실 반다문화주의자들이 근원적 존재론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즉 이들이 옹호하는 것을 천명한다. 정

책의 서문에서 “(1)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모든 문화를 존중할 것이다”라는 규정을 제외하고 “(2) 캐나다 정부는 모든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도울 것이다. (3) 캐나다 정부는 국민 화합을 위하여 모든 캐나다 문화 집단 사이의 창의적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4)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캐나다의 공식 언어 중 하나라도 습득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46). 캐나다 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시작부터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고 문화 집단 사이의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도록 의도하였다.

이렇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문화 집단의 교류와 주류 사회로 참여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문화주의의 문화 보존(preservation of culture)이 반다문화주의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문화주의의 가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그 환경을 벗어나 더 자유롭게 다른 정체성을 탐구할 것이다”(48)란 가설 말이다. 캐나다의 상황에서 이 가설은 다음처럼 적용되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는 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문화적 관행을 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을 때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캐나다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 집단이 캐나다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동안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반다문화주의자들에게는 차이를 찬양하고 문화를 전시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1971년 최초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1988년 다문화주의 법안 사이에 일어난 변화이다. 라이언이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인들의 다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모든 캐나다인들이 평등하도록 노력한다”(49). 1971년 법안은 다문화 유산을 존중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에 1988년 법안은 사회적 평등의 성취를 동일하게 강조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 협의적으로 ‘문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라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측면들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광범위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반다문화주의자들의 답론은 문화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다문화 현상이 내포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와 평등의 추구라는 총괄적인 역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언이 반다문화주의자들의 답론을 오로지 다문화 혐오증이라고 폄하한 것은 아니다. 라이언은 반다문화주의자들의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캐나다인들이 생각하고 토의해야 할 문제로 삼았다. 라이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문화주의자이든 반다문화주의자이든 또 상호문화주의자이든지 상관없이 필요한 태도이다.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논의를 관용과 이해심을 가지고 청취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언은 자신의 논의의 마지막에서 결국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살기 좋은 사회라고 요약한다. 살기 좋은 사회란 합의된 법을 존중하고, 관용하고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인 법 체제를 가지고, 다른 시민들이 의무와 권리 망 속에서 공존하는 이웃임을 인식하는 사회이다.

## 5. 결론

### 5.1.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가능성

21세기에 과연 다문화주의는 가능한 것일까?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는 다양한 가치의 주장이 가능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 ‘다양성의 공존과 존중’ 그리고 ‘제 3의 민족주의의 부상’과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다문화주의는 오늘날의 가치와 상충되지 않고 정치적 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바로 직전 세기는 오늘의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가령 1960년대는 인류에게 단 하나의 특성을 주장하는 시대였다. 나치즘(Nazism)은 아리아인(Aryan, 독일 나치당에서 주장한 비유대계 코카 소이드인), 유대인, 슬라브인 등을 비롯한 민족들 사이에 환원불가능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과 그의 지지자들은 인간성의 본질적 동질성을 주장한 바 있다. 킹 목사는 피부색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백인과 흑인을 이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차이를 강조한 시대’의 대표적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성적 토대에서는 휴머니즘과 인권과 시민권이 새로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인종이든 종교이든 그 어떤 단체이든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차이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다. 가령 흑인 중심주의, 민족성, 여성성, 소수자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등은 새로운 진보적 정치학의 핵심으로 대두하고 있다. 인간 본성과 근원에 다가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공동체 삶의 유지에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라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거부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늘날 세계화-세방화-다문화라는 사회적 배경을 인식(이피스테메 episteme, 앞)하는 첫 걸음 일 것이며, 현실 인식의 핵심 일 것이다. 다문화주의 시대에 다름과 차이의 인식의 정도와 방법론은 이제 공론의 장에 나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러한 공론장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사회가 다인종(multiethnic)이거나 다문화가 되었다는 인식은 인구통계나 경제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일련의 ‘도전’이며 새로운 ‘정치 아젠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도전과 정치적 아젠다를 충분히 갖추어야 할 시기에 이미 와 있다. 물론 한국 사회 자체 내에서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이 한국 사회에 진입한 이들로 인해 야기된 혹은 야기될 문제들도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에 맞설 새로운 정치적 아젠다와 여건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경제적 이유에서든 혹은 다른 가능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이든 한국 사회에 새로이 진입한 이들을 위한 정치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의 일원이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이주 소수자들을 위한 풍부한 정치적 담론과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장치를 갖추게 할 담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과 정치적 아젠다와 정책적 방안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장벽들은 한국적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분단 현실이나 단일민족국가, 복지국가 경험의 부재, 오래된 좌우의 이념적 논쟁, 성장과 분배의 문제 등과 같은 한국적 특수성은 다문화주의를 긍정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한계 상황으로 작용한다.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오래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다. 미래 창조적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한국적 특수성은 더 이상 장애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기초를 닦는데 토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자유주의적 이상이 아니며 정치 철학도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가 극도로 발전하여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다문화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세계화와 세방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직면하면서 사회 각 부분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

계와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블로그, 카페 등)과 팟캐스트(이빠유! 다문화 팟캐스트, 다문화 담론) 방송까지도 다문화 담론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한국적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반증한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그 어떤 이념적 편중을 뛰어넘고 온갖 장애와 한계를 극복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고대하고 있다.

## 5.2.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위한 제언

세계화의 일환으로 거대한 물결처럼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정책적 결실을 맺고 있다. 한국에서의 초기 다문화주의는 마치 다문화 광풍처럼 실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가령 중앙 정부의 여러 기관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과 기업체들은 다채로운 다문화 정책, 캠페인, 선심성 혜택, 혹은 일회성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의 모든 부분과 내적/외적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다문화주의 정책 실현에 관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비전 제시를 위해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펼쳐질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국민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그 초점이 결혼 이주 여성과 이들이 속한 가정에 맞추어져 있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정책을 주도하는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에 2012년에 95억 6천 5백만 원을 책정한 데 비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기금에서 다문화 양육 교육 예산으로 2012년에 546억 800만원을 책정하였다. 또 여성가족부는 2013년 다문화 가족 예산을 617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이렇게 여성가족부 주도로 결혼 이주 여성과 이들의 가정을 위해 펼쳐지는 다문화

정책은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포괄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다문화 정책의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이 법이 포괄하지 않은 이주민들도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에서의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들에서 추론해 보건대,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 질서에 대해서 무지하다. 가령 직장 내 성희롱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기본적 예절을 숙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다각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직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이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주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 의무이다. 정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직무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QS2000, MRP, ERP 등과 같은 품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다.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 내 문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같은 시민교육을 사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 부처에서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들 중 일부는 이주민의 문제 일뿐만 아니라 실상은 대한민국 일반의 문제인 부분들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불필요한 이념적 정쟁이 다문화주의에 전가되어,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 다문화주의는 인간 삶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고 인권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서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도 실상은 경제적 그리고 노동의 문제에서 다문화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재건을 목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거 유입했던 서유럽처럼 한국 사회도 3D와 같은 특

정 산업부분에서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고학력 한국 사회에서 3D와 같은 노동 집약형 산업은 한국 산업구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과 경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의 구조적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창조적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 5.3. 상생을 위한 한국적 다문화 모색

#### 요약

1. 한국에서 출생 성장한 다문화 배경 한국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 반다문화 담론 대처에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3. 무슬림 문화와 상호 문화적 소통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4. 이주 노동자와 원어민 외국인 강사들에게 상호문화이해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5.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다문화 현상이 1993년 이래로 한국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제화와 선진화와 연결되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 역시 고찰해 보았다. 이렇게 다문화를 수용하면서 다문화에 관련된 용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주의를 구분하였으며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란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또 다문화 현상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다문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란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모두가 협력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다.

각종 다문화 관련 통계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현상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다문화 가족이 안정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각 부서들과 여러 사회 기관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들 중에서 표10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와 그림10 출생아수 추이와 그림 11 전체 출생대비 다문화 비중과 표11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은 앞으로 외국에서 이주해 오지 않고 한국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한국인 성인들이 다문화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미래가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데에 집중한 역량 중 상당 부분을 이제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배경 한국인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정주민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과 사회적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돌려야 한다. 이는 교육과 문화 상품 생산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에 시민교육 개념을 도입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배격하고 평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과급력이 강한 문화 상품에서 평등과 상호 존중에 반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여러 해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반다문화 담론이 이제는 무시 못할 현실로 정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각종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반다문화 담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때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 문제가 있다면 어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예견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반다문화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가 단지 문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과 복지와 교육과 인권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반다문화 현상에 대한 대처는 우리 사회의 복지와

교육과 인권 제도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대처는 여성복지부와 같은 한 부서가 담당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같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춘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반다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로서 노동 환경 개선,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 교육, 외국인 집단 거주화 억제 등이 있다. 3D 업종의 노동 환경 개선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낮추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이미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를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하는 인권 교육을 정주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에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거주자 17,142명 중 70%인 11,996명이 외국인이며 귀화 한국인까지 합치면 75%에 이른다 (안산 내일신문 8월 29일). 이 지역이 국경 없는 다문화 특구가 되면서 그 이국적인 문화적 특성 뿐 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다문화 특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범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확대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집단거주하는 결국 상호문화적 소통을 방해하고 나아가 거주 지역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결국 이주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여 반다문화 담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다문화 정책을 펼친 유럽의 각 나라들이 다문화주의를 포기하고 상호문화주의에 집중하는 현실을 살펴보았다. 다언어주의를 공식 언어 정책으로 채택할 만큼 상호문화 소통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포기한 것은 유럽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뿌리가 다른 이슬람문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무슬림 문화와 어떻게 상호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리 정책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다문화에 대처하는 것의 일환일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다문화주의의 선두주자이자 여전히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캐나다의 다문화와 반다문화 관련 논의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옹호론자들은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경청하여 유용한 지적을 수용하여 다문화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정책을 국가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전개해 나가는 캐나다의 논의가 한국의 다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듯하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든 한국에서든 다문화가 지향하는 사회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즉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상호 관용과 이해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 지향하는 사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문화 관습과 생활 법률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과 성희롱 성추행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원어민 외국어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 문화와 법을 잘 이해하여 정주민들과 조화롭게 생활함으로서 반다문화 담론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경산시 진량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생활 법률과 상식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경산 진량 공단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자유투박을 운영하며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여 거주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역시 좋은 예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살기 좋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한국적 다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 Abstract |

This study,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searches for an intellectual matrix for the 21st century which i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glocalization. These two phenomena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the integration has been causing unprecedented social problems and tensions. Most of all, anti-multiculturalism is rising rapidly and its rise began to raise the issues of national identity, social justice, and ideo-political direction of the nation at a totally new level.

This research endeavors to contemplate globalization, glocalization, multiculturalism, and anti-multiculturalism in one spectrum. It tries to provide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Korean multiculturalism and search for alternative multicultural discourses by analyzing multiple discourses and the ideological rivalry between anti-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ism.

In particular, this project defines the basic concepts for discussing multicultural reality and issues. Furthermore, it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s of multiculturalism and anti-multiculturalism taking examples from the Canadian case in the 1990s. It also explores the pros and cons of European interculturalism and surveys multicultural efforts of other nation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muticultural discourses in its efforts to integrate the globalizational discourse and the glocalizational discourse. A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a vision of sociogenetic Korean identity for the 21th century and present future-oriented muticultural discourses.

## | 참고 문헌 |

### □ 국내 문헌

- 곽준혁 「특집 :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 미국 :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30권0호 (2007): 126-44.
- 김경우. 「한국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9권 제10호, (2012): 31-60.
- 김경학. 「퀘벡 ‘상호문화주의’의 문화적 다양성 관리의 한계: 시크 ‘키르판’ 착용 논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2010): 473-504.
- 김규철. 『다문화를 중단하라!!』 가평: 한강, 2012.
- 김영숙, 우정환.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3집, (2012): 69-103.
- 김종세.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8집, (2012): 27-49.
- 김희경. 「유럽연합의 다언어주의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3권 제4호, (2009): 15-23.
- 박돈해.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도입에 관한 고찰 - 신제도주의적 시각을 통한 분석」,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2004): 725-35.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11.
- \_\_\_\_\_.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시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2007): 39-69.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유정석. 「특집 :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 캐나다 :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민족연구』 30권0호, (2007): 16-26.
- 이부미.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 다문화 교육의 혼돈과 이해」, 『한국의 다문

- 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정병호, 송도영 역, 서울: 현암사. (2012): 241-65.
- 이선필. 「유럽의 다문화정책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시민권을 통해서 본 유럽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전망」, 『국제학논총』 제13집, (2009): 139-67.
- 이은혜. 「한국의 다문화주의 전개와 개선방향」, 『법과정책』 18권2호 (2012): 463-490.
- 이종두, 백미연.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12): 335-61.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1999.
-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호, (2009): 109-30.
- 정경희. 「다문화주의 논쟁: 담론과 구도」, 『歷史教育』 제110집, (2009): 211-42.
- 최성환 외. 『다문화의 이해 :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09.
- 최응선, 이용모, 주운현.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1호, (2013): 33-70.
- 최인철. 「다문화 사회의 심리적 도전과 과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93-101.
- 하상복. 「황색 피부, 백색 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제33집, (2012): 525-56.

## □ 영어 문헌

- Alibhai-Brown, Yasmin. *After Multiculturalism*,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0.
- Alund, Aleksandra & Schieup, Carl-Ulrik. *Paradoxes of Multiculturalism*, Aldershot: Avebury, 1991.
- Baumann, Gerd. *Contesting Culture: Discourses of Identity in Multi-Ethnic*, Lond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Benhabib, Seyla.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Caldwell, Christopher.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 Immigration, Islam and the West*. London: Allen Lane, 2009.
- Emmerson, Michael. *Interculturalism: Europe and its Muslims, in search of Sound Societal Models*.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011.
- Fassin, Didier. 'Culturalism as Ideology.' *Cultural Perspectives on Reproductive Health*. Ed. Carla Makhou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Glazer, Nathan.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Greenfeld, Liah. *The Spirit of Capitalism: Nationalism and Economic Growth*. Boston: Harvard UP, 2003.
- \_\_\_\_\_.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Boston: Harvard UP, 1992.
- Kolapo, Femi James. *Immigrant Academics and Cultural Challenges in a Global Environment*. New York, USA: Cambria Press, 2008.
- Kymlicka, Will(ed.).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1995.
- Magnarella, Paul J. 'Justice in a Culturally Pluralistic Society: The Culture Defense on Trial.' *Journal of Ethnic Studies* 19 (1991): 65–84.
- Modood, Tariq. *Multicultural Politics: Racism, Ethnicity, and Muslims in Britai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Still Not Easy Being British: Struggles for a Multicultural Citizenship*. Stoke-on-Trent: Trentham, 2010.
- \_\_\_\_\_. *Multiculturalism*. Cambridge: Polity, 2013.
- Murphy, Michael. *Multiculturalism: A Critical Analysis*. London: Routledge, 2012.

- Nairn, T. 'Post-2001 and the Third Coming of Nationalism,' *Arena Journal*, (2004): 81-98.
- Pollitt, Katha. 'Whose Culture?'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Eds. Joshua Cohen, Matthew Howard, and Martha C. Nussbau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Ryan, Phil. *Multicultiphob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0.
- Schlesinger, Arthur J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Norton, 1992.
- Shachar, Ayelet. *Multicultural Jurisdictions: Cultural Differences and Women's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Song, Sarah. 'Majority Norms, Multiculturalism, and Gender Equa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no. 4 (November 2005): 474-89.
- Stolcke, Verena. 'Talking Culture: New Boundaries, New Rhetorics of Exclusion in Europe.' *Current Anthropology* 36, no. 1 (1995): 1-24.
- Uberoi, Varun. 'Multiculturalism and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Political Studies*, 47(4) (2009): 805-27.
- Vertovec, Steven.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 (1996): 49-69
- Waters, Mary C. *Ethnic Op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Bowen, John R. "Europeans against Multiculturalism," *Boston Review*. Boston Review and its authors, 1 July 2011. Web. 31 Aug. 2013.
- James Erwin. "Bostoy: the Norwegian prison that works." *The Guardian*. Guardian News and Media Limited or its affiliated companies, 4 Sep. 2013. Web. 25 Oct. 2013.
- Council Resolution of 31 March 1995 on improving and diversifying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ithin the education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95/C 207/0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5Y0812\(01\):EN:NOT](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5Y0812(01):EN:NOT)

The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3-04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 담론 분석을 통한  
세방화 시대의 다문화 담론 모색**

---

2013년 12월 27일 인쇄

2013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안세영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Tel. 02)571-0002 Fax. 02)572-4092

인 쇄 알래스카인디고(주) Tel. 02)2277-6777

---

ISBN 979-11-5567-011-8

ISBN 979-11-5567-007-1 (세트)